
2017년 국내외 트렌드 변화와 대전세종의 비전

2017. 3.

대전세종연구원

▣ 참 여 연 구 진 ▣

- 연구 책임

이 정 범

- 연구 참여

고봉준, 김소영, 김종법, 안기돈, 문경원, 금홍섭, 김수현, 이정림

- 부문별 작성

2017년 글로벌 트렌드 & 주요 선진국가 비전 : 고봉준, 김소영, 김종법, 이정범

2017년 한국과 대전세종의 비전 : 안기돈, 문경원, 황혜란, 이정림

2017년 대전세종의 발전 전략과 과제 : 금홍섭, 김수현

연구 요약

1 2017 세계 전망

□ 정치·외교·안보

- 브렉시트와 미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신고립주의 확산,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세계질서 대전환 예고. 대규모 난민 위기와 극단주의 테러 등 분쟁 심화, 대북제재 완화 전망

□ 경제·무역·산업

- 미국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선진국경제에서도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소득불평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과학기술·혁신

- 세계적 기술컨설팅 회사, 가트너(Gartner)는 2017년 10대 전략기술로 인공지능과 고급머신러닝, 가상/증강현실(VR/AR),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block chain) 등 선정

2 주요 선진국가의 비전

□ 미국

- (트럼프 대통령 당선) 미국 우선 기조에 따라 국제적 역할 축소 가능성, 해외 군사개입 축소, 동맹/우방의 방위분담 확대. 대외경제 정책도 미국의 경제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전망

- **(경제적 불평등 심화)** 경제적으로 금리 인상, 완만한 경기회복, 제조업 중심의 성장 도모,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실패와 사회양극화 심화 가능성

□ 유럽

- **(EU통합 후퇴)** 브렉시트로 인한 EU통합의 불확실성 증가, 영국과의 금융·무역부문의 약화는 EU내의 제조업 분야에 영향 예상, 특히 난민문제나 이민정책 등 회원국 간의 공조 어려움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
- **(난민문제 심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의 제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규모가 큰 난민 유입으로 정치적 혼란과 위기 가중, 지속적 테러 상황 발생과 그로 인한 극우세력의 강화현상이 전유럽적으로 발생

□ 중국

- **(소강小康사회)** 2016년 중국은 2020년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이 보장된 소강사회 실현 피력
 - 2016년 양회 쟁점: 13·5 계획, 탈빈(脫貧)프로젝트, 공급 측 개혁, 일대일로, 자선법(慈善法), 사법체제 개혁, 친환경 발전, 반(反)부패의 제도화
- **(경제성장 감소)** 중국 경제는 2015년 6.9% 실질 성장에 이어 2016~18년 사이에 성장률이 6.7%, 6.4%, 6.1%로 감소 할 것으로 전망(OECD 2016년 11월)

□ 일본

- **(군사력 지속 증강)**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의 승리, 일본 방위성 2017년 예산으로 5조1686억엔 요구. 이는 전년 대비 2.3% 증액된 것으로 일본 국방예산 사상 가장 많은 액수이자 5년 연속 증액 편성
- **(경제적 정체)** 일본 경제는 2015년 0.6% 실질 성장에 이어 2016~2018년 사이에 성장률이 0.8%, 1.0%, 0.8%로 정체될 것으로 전망(OECD 2016년 11월)

□ 기타

- (인도) 경제성장 지속, 2012~2013년 조정기를 거쳐 2015년에 이미 중국 성장률 초과(7.6%), 2016~2018년 사이에 7.4%, 7.6%, 7.7%로 꾸준히 성장률 신장시킬 것으로 전망(OECD 2016년 11월)

- (러시아) 트럼프의 당선으로 새로운 미러관계(reset) 가능성 타진, 트럼프의 환경보호정책 전면 철회 주장으로 원유 공급 과잉으로 인한 유가 하락 가능성

1 한국의 변화

□ 한국의 거시 및 미시적 차원의 변화

- **(거시적 변화)**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회복력 취약,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한국경제 구조변화, 국내 정치권력 비리에 따른 국정혼란 지속, 미국대선 및 남북교류 중단 등 대외정세 불확실성 증가
- **(미시적 변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현재의 즉각적, 자기지향적 감정과 경험만족 추구하는 新개인의 탄생. 네트워크로 연결, 개인의 자율권 증대와 정서적 소통에 대한 강한 열망 특징
- **(미래전망과 지향가치)** 시민들은 미래사회를 기술발전으로 삶의 편리성 증가하지만, 문명발전의 혜택은 소수만 누리는 양극화 사회로 전망. 또한 현재 대한민국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가치로 1위 공정성 제시

2 도시의 미래와 선진도시 사례

□ 혁신의 실험실로서의 도시 모델 부상

- **(도시혁신)** 지역혁신의 새로운 모델로서 도시혁신의 중요성 부각, ICT를 기반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는 스마트 도시, 도시전환, 디지털 혁신 등 사례 다양하게 전개
 - 암스텔담 기후거리, 테크샵, 스마트산란테르(스페인) 등
- **(맨체스터 과학도시)** 과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도시성장 모델을 기치로 민간부문의 다양한 도시실험과 혁신활동을 지원 중

- 'CityVerve'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참여, 도시문제해결 등의 가치구현

o (서울시의 혁신파크) 서울시는 시정 기초의 주요 전략의 하나로 '사회혁신' 설정하고, 2015년 4월 사회혁신 플랫폼 '서울혁신파크'개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의 공유지이며, 배움과 놀이의 창의공원으로 활용

- (구)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원 부지 3만평에 180개 사회혁신그룹과 1,000여명의 사회혁신가 참여

3 대전세종 현황과 SWOT분석

□ 대전

o 대전은 청년세대 비중이 높은 젊은 도시, 편리한 교통, 친환경 도시생활 공간 보유. 하지만 최근 저조한 경제성장률, 산업구조 조정 필요, 복지수요 증가하나 자활능력에 기반 한 생산복지 시스템 미흡

o SWOT



□ 세종

- 세종은 국토 중앙에 위치하여 행정중심 도시로 발전. 지속적 인구유입, 총면적의 70%는 비도시지역으로 도농 관련 육성정책 가능, 중부권 경제성장의 견인 역할과 주변도시와의 상생발전 가능

○ SWOT



4 2017 대전세종 비전과 주요과제

□ 2017 대전의 비전과 주요과제

- (경제활력) 대규모 현안 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 모색,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SW산업 육성
 - 사이언스콤플렉스를 지역상생의 모델로 기획, 기초과학연구원 준공 및 신동 둔곡 지구 과학벨트 사업 추진, FIFA국제스포츠대회 및 아시아·태평양 도시정상회의 개최 현안사업 조속 추진
- (도시혁신) 대규모 대중교통(트램) 혁신, 도시재생, 스마트 안전 등 도시 인프라의 혁신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 도시철도2호선(트램) 건설을 위한 계획수립과 스마트 트램, 유성광역

복합 환승센터 조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계획 등 교통 공영 기능 강화

- **(포용도시)** 세대, 계층, 지역, 성별 격차를 완화하고 도시성장의 성과를 공유하는 포용적 도시시스템 구축
 - 맞춤형 급여 도입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시민발굴 및 지원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여성 일자리의 다각화 등

□ **2017 세종의 비전과 주요과제**

- **(실질적 행정도시)** 지역, 행정을 아울러 국가균형을 매개하는 중심도시 기획
 - 국토중심의 균형벨트 조성, 세계 수범 행정중심도시 기반 구축, 조치원서북부 도시개발 및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건설, 세종중심의 전국광역교통체계 기획
- **(여성아동 친화도시)**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커뮤니티 인프라 조성
 - 영유아 보육료, 기초연금, 청소년 문화카드, 무상급식 지원, 2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개칭 및 운영 등
-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글로벌 도시 모델을 선도하는 미래도시 시스템 개념을 제시, 구현
 - 첨단스마트도시 인프라 조성, 세종형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행정 시스템 구축,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등

대전의 비전과 전략 및 주요과제

비전	전략	주요과제
경제활력 대규모 현안사업의 본격 추진, 제4차 산업 혁명의 SW산업 육성	· 사이언스콤플렉스 과학과 혁신 지역상생의 모델로 기획 · 기초과학연구원 준공 및 신등둔곡 지구과학벨트 사업 추진 · 노후산업단지 재생 · FFA국제스포츠대회 및 아시아태평양 도시 정상회의 개최	
도시혁신 대중교통(트램) 혁신, 도시재생, 스마트 안전 등 도시인프라의 혁신	· 도시철도2호선(트램) 건설 계획 수립과 스마트트램 유성광역 복합 환승센터 조성, 교통공영기능 강화 · 물순환체계의 정립, 폐기물 배출관리 통한 지속가능성 확대 ·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포용도시 세대·계층·지역·성별 격차 완화, 도시성장의 성과 공유	· 맞춤형 급여 도입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시민발굴 및 지원 강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여성 일자리의 다각화 · 혐오와 단절, 폭력으로 부터의 성평등 추구 · '1인 가구대세 시대'의 청년과 노인, 여성에 대한 보살핌	

세종의 비전과 전략 및 주요과제

비전	전략	주요과제
실질적 행정도시 지역, 행정 아울러 국가 균형을 매개하는 중심도시 기획	· 국토중심의 균형벨트 조성, 세계수범 행정중심도시 기반 구축, 협력 거버넌스 모델 설계 ·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 및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건설, 세종 중심의 전국 광역교통 체계 기획	
여성아동 친화도시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커뮤니티 인프라 조성	· 영유아 보육료, 기초연금,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 2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개칭 및 운영 · 무상급식 지원, 로컬푸드 상생문화관 설치 · 문화재단 운영, 1생활권 시립도서관 건립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글로벌 도시 모델을 선도하는 미래도시 구현	· 첨단스마트도시 인프라 조성, 세종형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행정 시스템 구축 ·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미래 도시 인프라 설계 및 구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위생매립장 정비,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 대전세종 상생 협력 사업



(지식도시) 광역도시권 역량강화 체계 구축

지역 상생 발전 실현 할 수 있는 제도적 협의체 구성



지식생산 도시 기능 고려한 기반시설 (컨벤션 호텔 등) 확충 인재 육성 유기적 연계

상생인프라 확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마련
첨단ICT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산업혁신 분야 상생발전

대전-세종 첨단산업기술 융복합 메카 육성

대전-세종 도농교류 지원
지역식량체계 (local food system) 구축

대전-세종 첨단도시 기능 연계한
문화관광 상품 발굴 및 관광브랜드화

1 상생 · 협력 발전의 배경

□ 지방자치 20년, 새로운 기회와 도전 직면

-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 주민의 공적 참여 부진 상황, 각종 부정부패와 예산낭비 지속,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으로부터 불신
- 대전 · 세종을 중심으로 '상생 · 협력 · 통합'을 강조하고 '갈등 · 반복 · 분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발전방안 모색 필요

2 민선6기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진단

□ 민선6기 대전광역시 평가

- 도시철도2호선 건설방식 트랩 확정, 갈등조정 및 소통을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등 6대 영역 21대 핵심과제 추진으로 좋은 성과 도출
- 하지만 수돗물 민영화, 시산하 기관장과 직원간의 인사갈등, 서남부권 호수공원 개발 등 논란 초래

□ 민선6기 세종특별자치시 평가

- 국민안전처 등 중앙부처 이전,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확정, 인구증가 등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위한 행정적 · 재정적 기반 형성
- 하지만 KTX세종역 신설과 KTX서대전역 경유문제,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주변지역과의 갈등 초래, 금개구리 보전문제 및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 주민 간, 민-관 갈등 발생

3 대전세종의 상생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

□ 지속가능한 도시 측면

- 도시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새로운 도시성장 및 지역발전 방안을 제시, 특히 도시개발에 따른 환경보전 대책과 오염예방과 통합관리가 가능한 정책을 제시 필요

□ 지방정부간 관계 (IGR; Inter-governmental Relations) 측면

- 대전·세종간 전략적 협력과 제휴를 통해 역량을 결집하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생발전을 위한 거버넌스를 강고히 구축해야 함

□ 시민사회의 역할 측면

- 건강한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보완 필요. 세종시는 유입인구의 증가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연구와 지방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

4 2017 대전세종 상생발전 과제

□ 지속가능한 도시 측면

- 지속가능한 도시 형성을 위한 시책추진 방향
 - 토목개발 시대를 벗어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
-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관리
 - 주변지역과 연계한 광역권 차원의 도시 성장관리 정책 도입
-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부합하는 관련 계획의 재검토 및 대안모색
 -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목표 설정
- 시민의 삶의 질, 생태적 가치, 분배정의를 추구하는 생활정치 구현
 - 도시 난개발 예방, 신도시와 구도심권의 균형발전 방안 모색

□ 지방정부 관계 측면

- 대전과 세종의 상생협력 우선
 - 충청권 및 기타지역과의 상생협력과 갈등관리 역량 제고
 - 충청권행정협의회를 상설협력기구로 위상 격상
- 새로운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공조협력
 - 과학도시와 행정도시가 상생하는 신성장동력 발굴 및 추진
 - 두 지역간 대표축제 발굴 및 공동개최
 -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의 강점 활용한 로컬푸드 공동협력
- (가칭)한국분권센터 설치운영
 - 한국분권센터 설치하여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연구 전문화
 - 중앙권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지방단위 네트워크 구축

□ 시민사회의 역할 측면

- 상생협력을 위한 비전과 과제에 시민 공감대 형성
 - 상생협력의 가치를 양 도시의 시민이 우선적으로 공유하고 합의
 - 지방정부만이 아닌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상생협력 필요
 - 상생협력을 위한 지속가능한 전략 수립

〈제목 차례〉

I. 글로벌 트렌드 & 주요 선진국가의 비전	3
1. 글로벌 트렌드	3
1) 정치·외교·안보	3
2) 경제·무역·산업	4
3) 과학기술·혁신	6
2. 주요 선진국가의 비전	9
1) 미국	9
2) 유럽	12
3) 중국	17
4) 일본	19
5) 인도	20
6) 러시아	20
II. 2017 한국과 대전세종의 비전	23
1. 대한민국 거시변화	23
1)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회복력 취약	23
2)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구조변화	24
3) 정치부문	25
4) 사회부문	26
2. 대한민국 미시변화	27
1) 시민의 인식과 감정	27
2) 미래전망과 지향가치	27
3. 도시의 미래와 선진도시 사례	28
1) 혁신의 실험실로서의 도시 모델 부상	28
2) 도시혁신의 국내외사례	29
4. 대전세종 현황과 SWOT분석	31
1) 대전	31
2) 세종	32
5. 대전세종 비전의 전략 및 부분별 주요과제	34
1) 대전	34
2) 세종	37
3) 대전세종 상생 협력 사업	38
참고문헌	41
III. 2017년 대전세종의 발전 전략과 과제	45
1. 상생·협력 발전의 배경	45
2. 민선6기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진단	46
1) 민선6기 대전광역시 평가	46
2) 민선6기 세종특별자치시 평가	47
3. 대전·세종의 상생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	48

4. 대전·세종의 상생협력을 위한 2017년 발전전략 과제	50
1) 지속가능한 도시 측면	50
2) 지방정부 관계 측면	51
3) 시민사회의 역할 측면	53
5. 나오는 말	53
참고문헌	55

IV. 「2017 대전세종비전」 워크숍 토론요지

1. 제1분과 총론	65
2. 제2분과 경제 · 과학	67
3. 제3분과 도시계획 · 안전	69
4. 제4분과 복지 · 여성	71
5. 제5분과 교통 · 환경	73
6. 제6분과 문화 · 교육	75
7. 제7분과 세종시 지속가능한 성장	77
8. 제8분과 세종시 질 좋은 시민의 삶	79

I. 2017년 글로벌 트렌드 & 주요 선진국가 비전

- 1. 글로벌 트렌드
- 2. 주요 선진국가의 비전

I. 글로벌 트렌드 & 주요 선진국가의 비전

1. 글로벌 트렌드

1) 정치·외교·안보

□ 브렉시트와 미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신고립주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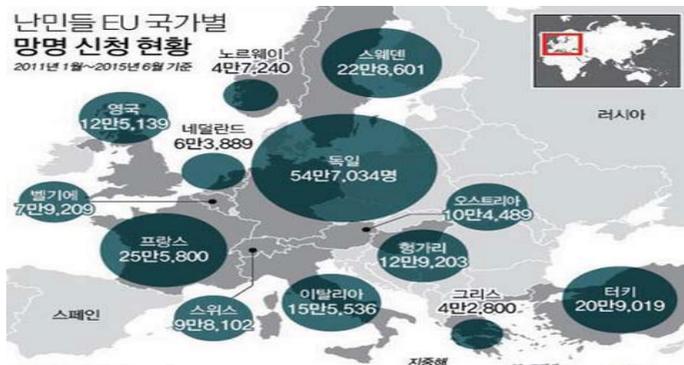
- 브렉시트와 트럼프즘은 개별 국가적 사안이 아니라 전후 미국·영국을 중심으로 공고화된 자유주의적 세계질서의 와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전환을 예고함

□ 대규모 난민 위기와 극단주의 테러 등 분쟁 심화

- EU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 사태에 직면하면서 난민 문제로 인한 내부 정치 균열이 심화

▮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아프리카·중동 지역에서 1백 만 명 이상의 난민이 유입되면서 난민의 서유럽행 주요 통로인 ‘발칸 루트’ 차단에 따른 난민 사태 폭발 위기가 상존

EU 난민 유입 규모 (유엔난민기구 2015)



□ 대북제재 완화

- 트럼프 행정부 대북 윤곽이 잡힐 때까지 2017년 상반기에는 북한이 주도하는 형세가 될 것으로 전망

▮ 북한은 대미 제의로 평화협상 체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남한은 개성

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대화 국면으로 전환 가능성 고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정은 정권 5년 평가 및 2017년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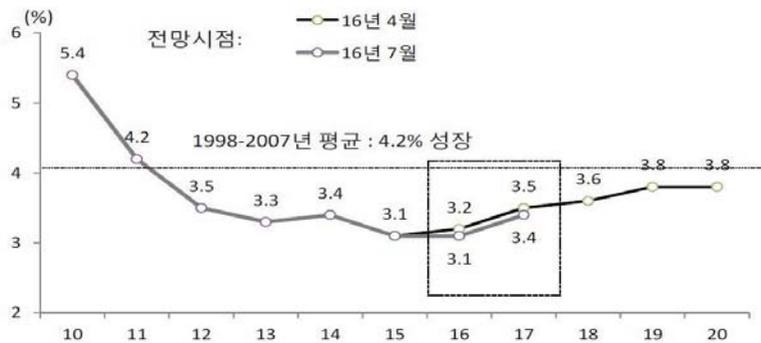
2) 경제 · 무역 · 산업

□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대

-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제 유동성 축소,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과 더불어 선진국간 통화정책 비동조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과 혼란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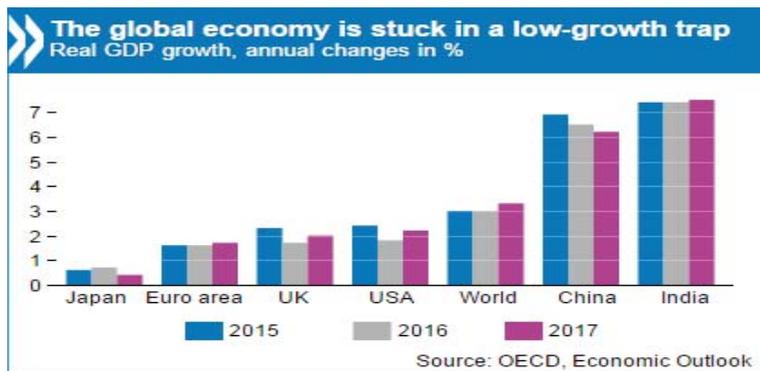
▮ 국제통화기금(IMF)는 브렉시트로 인해 2017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을 0.1%p 하향 조정

세계경제 성장률 증기 전망 (IMF 2016)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ly 2016*

세계 및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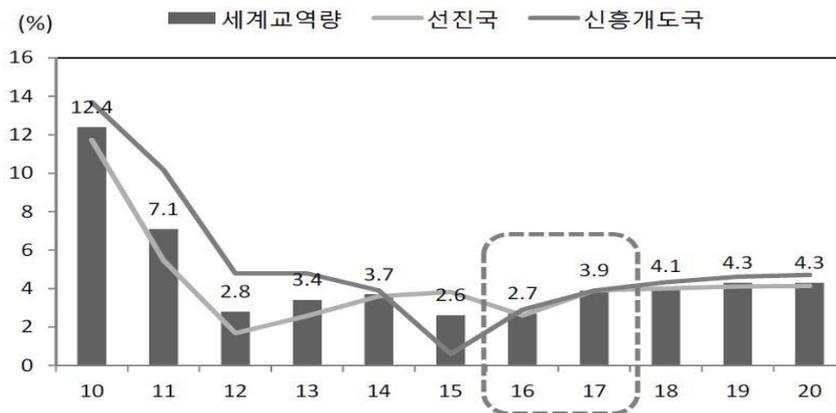


□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 글로벌 생산 분업체계의 약화, 세계경제 성장과 교역량간 상관관계 약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교역량 위축 전망

▮ 2017년 세계 교역량은 2016년(2.6%)보다 증가한 3.9%를 기록할 전망이나 세계경제성장세에 대한 교역 탄성치는 하락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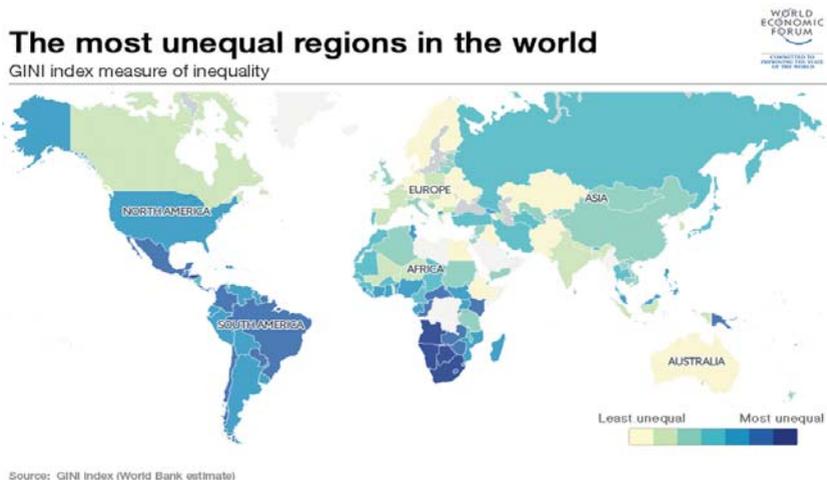
세계 교역량 증기 전망 (IMF 2016)



□ 세계적 양극화 심화로 인한 경제 회복 위협

- 개도국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소득 양극화가 선진국 경제에서도 심화되면서 소득 불평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세계 지역별 소득 불평등 수준 (WEF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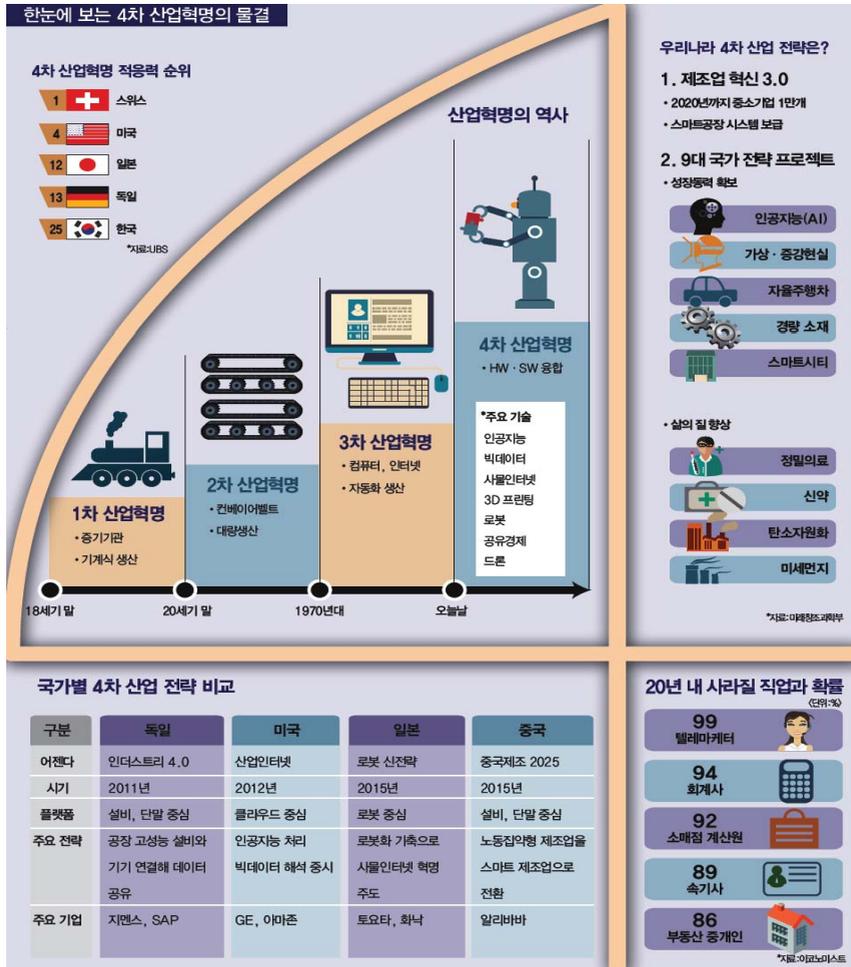
3) 과학기술 · 혁신

□ 4차 산업혁명의 명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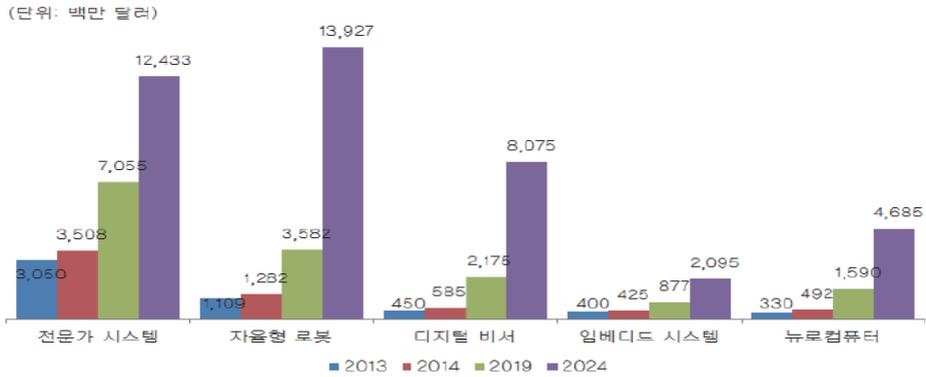
-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드론,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이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은 혁신적 기회인 동시에 인간소외 · 대체 등 잠재적 위협 제기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가장 큰 부작용은 양극화 심화(61.7%), 대량 실업(14.7%), 인간 효용가치 하락(8.8%), 기계의 인간 지배(2.9%)로 나타남 (서울포럼 2016,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자 대상 설문)

4차 산업혁명의 물결 (매일경제 201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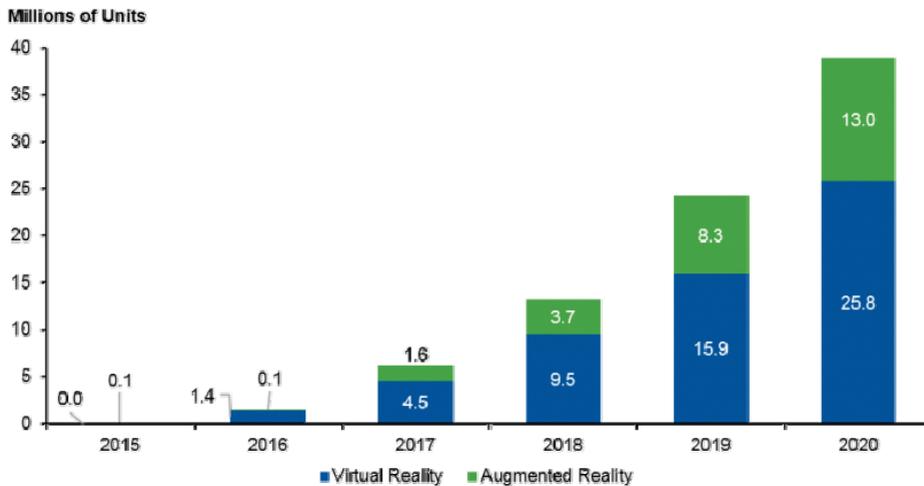
인공지능 기술 분야별 시장규모 전망 (Semens 2014)



□ 2017년 가트너(Gartner) 전략적 IT 전망

- 매년 전략 IT 기술 전망을 발표하는 세계적 기술컨설팅 회사 가트너는 2017년 10대 전략 기술로 인공지능과 고급머신러닝, 가상/증강현실 (VR/AR),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 (block chain) 등 선정

가트너 전망 가상/증강현실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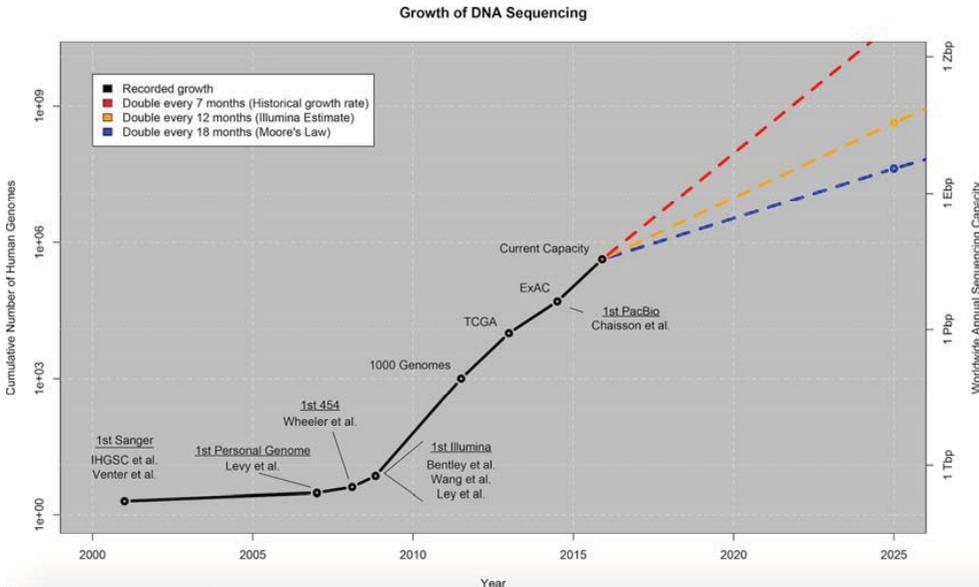
가트너 2017년 이후 10대 전망

① 2020년 1억 명의 소비자가 증강현실로 쇼핑 할 것	⑥ 2021년 개인 활동의 20%가 7대 디지털 기업 중 한 곳 이상과 연결될 것
② 2020년 인터넷 검색 세션 중 30%는 스크린 없이 수행될 것	⑦ 2019년 기업이 혁신 투자비용으로 1달러 당 7달러 추가 지출이 필요할 것
③ 2019년 브랜드 중 30%는 자사의 모바일 앱을 포기할 것	⑧ 2020년 IoT로 인해 데이터센터 스토리지에 대한 수요 증가가 3% 미만이 될 것
④ 2020년 알고리즘이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근로자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	⑨ 2022년 IoT 활용으로 유지,보수,서비스,소비자에 따른 비용이 연간 1조 달러 절감이 될 것
⑤ 2022년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 가치가 100억 달러에 이를 것	⑩ 2020년 전체 직원 40% 가량이 피트니스 트래커로 헬스케어 비용이 절감될 것

□ IT와 BT 융합 가속화(디지털 브레인)

-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디지털 혁명과 더불어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 IT 신기술이 뇌, 유전체 등 생명과학 연구와 결합하여 고령화·장수 시대에 건강·보건 분야의 획기적인 혁신 창출 전망

DNA 서열분석 기술 전망 (「The Digital Future of Brain Research」, WEF 2016)



2. 주요 선진국가의 비전

1) 미국

□ 트럼프즘(Trumpism)

- 제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
 - ▮ 트럼프 승리의 요인: ‘사이 트럼프’ 현상, 반세계화 및 반이민 정서가 합리적 논리 압도,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 심리(워싱턴 정치의 무능과 2대에 걸친 클린턴 집안의 집권에 대한 반감)
 - ▮ 결과적으로 백인 중산층(angry white)의 반란(미국인도 알지 못했던 미국의 변화: 미국에서 유일하게 평균 수명이 줄어드는 집단이 백인 남성. 그들의 경제적 파탄은 1980년대 흑인들이 처했던 상황과 유사)
 - ▮ 기존 여론조사 방식의 한계와 미국 주류 언론의 참패를 드러냄
 - ▮ 동시에 포퓰리즘의 위력을 입증. 세계화에 대한 반발이라면 포퓰리스트 민족주의의 전 세계적 출몰의 전조일 가능성(후쿠야마의 Foreign Policy 11월 기고문)
- 불확실성(Unknown unknowns)
 - ▮ 미국 정치의 아웃사이드이자 극단적 주장의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국내외 정책의 급변 가능성에 대한 우려 대두
 - ▮ 내치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극심한 양극화, 막말 정치로 인한 정치혐오증 심화, 기존 사회개혁 및 이민관련 정책의 대대적 수정 가능성, 중산층 및 제조업을 위한 감세 및 강력한 반이민정책 채택 가능성
 - ▮ 외치의 불확실성: 보호무역주의적 성향 강화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심화 가능성, 신고립주의로의 회귀 및 이에 따른 동맹/우방국의 신뢰 저하 가능성, 동시에 미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세계와 협력하겠다는 입장
 - ▮ 트럼프 독트린의 기초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처럼 ‘경제, 군사적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economic and military strength)’
 - ▮ 파리기후협약(2016년 11월 4일 발효) 탈퇴 공약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아 물질(physical), 디지털, 생물학적(biological) 경계를 허무는 제4차 산업혁

명의 기반이 되는 전 세계 과학혁신의 방향에 불확실성 증대. 분야에 따라 미국 우선(America First)이 China First로 이어질 가능성 잠복

- 대외전략의 기조와 아시아 정책 전망

- ▮ 미국 우선 기조에 따라 국제적 역할 축소할 가능성. 즉 복합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 최상의 방법은 ‘위대한 미국의 재건(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인식
- ▮ 해외 군사개입 축소, 동맹/우방의 방위분담 확대, 세계 경찰 대신 미국 국익에 집중하는 노선 시사
- ▮ 대외 경제정책도 미국의 경제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보호무역주의적 움직임 강화 전망
- ▮ 외교정책: 신고립주의적 맥락에서 공세적 현실주의 관점의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 가능성.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고 군사력을 불필요하게 역외에 배치하여 원치 않는 분쟁을 회피하고 핵심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개입한다는 입장
- ▮ 신고립주의가 전면에 대두되면 아시아지역에서 다른 세력에 주도권 내줄 가능성에 대한 우려 증대. 완전히 아시아에서 철수하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관점에 주안점을 둔다면 오바마 정부만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시하지 않을 가능성 존재
- ▮ 결과적으로 아시아에서 힘의 공백이 생길 가능성으로 미국 동맹국들의 입지가 어려워질 수 있음
- ▮ 통상이익과 규범(남중국해, 사이버안보, 환율조작 및 인권 등) 확립 문제에서는 미중관계가 악화될 가능성. 트럼프는 중국의 중상주의적 정책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
- ▮ 한국과 관련해서는 방위비 분담과 FTA 재협상이 현안이 될 가능성 높음

□ 경제

- 금리 인상

- ▮ 재닛 옐런 연준 의장 2016년 11월 17일, 순조로운 경제 회복 추세를 언급하면서 연내 금리 인상 및 2017년 추가적 금리 인상 시사

- 완만한 경기회복

- ▮ 미국 경제는 2015년 2.6%의 GDP 실질 성장에 이어, 2016년에 1.5%, 2017년에 2.3%, 2018년에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OECD 2016년 11월 전망치)

- 일자리 창출 또는 양극화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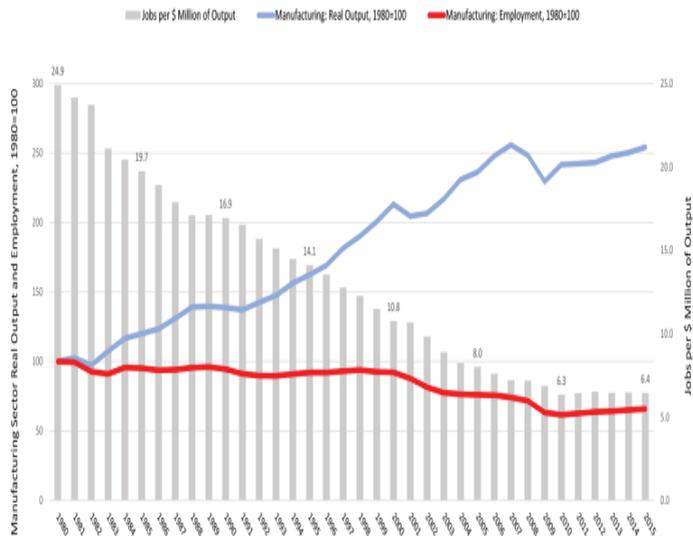
- ▮ 세계화와 신기술 개발에 따른 미국 내 일자리 양극화의 문제

- ▮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개인세와 법인세 인하, 오바마케어 폐지 또는 축소, 금융규제 완화 추진으로 경제 활성화 도모

- ▮ 트럼프의 경제 공약의 핵심은 제조에 종사하는 중산층에 일자리를 돌려주겠다는 것. 그러나 무인자동차와 인공지능 및 로봇틱스 분야에서의 급진적 기술 진전에 따르는 자동화의 추세는 제조, 운송, 서비스 업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기존의 추세를 변화시키는데 실패할 가능성(세계경제포럼 보고서)

-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 기초에서 제조업은 성장하지만 제조업 일자리는 정체되어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

Manufacturing sector inflation-adjusted output and employment, 1980 to 2015



Source: Brookings' analysis of Moody's Analytics estimates

B Metropolitan Policy Program
at BROOKINGS

2) 유럽

■ 유럽의 변화

□ Brexit로 인한 유럽통합의 불확실성 증가

- 영국의 탈퇴 결정은 유럽연합의 지속적인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음
- 영국과의 금융과 무역 부문의 약화는 EU 내의 제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난민 문제나 이민 정책 등에 있어 회원국 간의 공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사회적 비용 증가가 예상됨

□ Italexit(혹은 Italeave)의 가능성과 불안정한 유럽통합

- 현직 총리인 렌찌(Renzi)가 추진하고 있던 행정개혁과 상하양원제의 제도 개선 국민투표가 신임투표 형식으로 변질되면서 이탈리아 정부와 국가적 위기 상황 지속 우려
- 오성당(5 Stelle)과 북부동맹(Lega Nord)의 정치적 승리로 인한 유럽통합 탈퇴 가능성 존재함
- 두 정당 모두 유럽연합 탈퇴를 정치적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2017년 조기 총선이 실시되면 오성당을 중심으로 한 반유럽통합 정당연합의 승리 가능성 높음

□ 2017년 프랑스 대선과 극우정당의 집권 가능성

- 2017 4월에 예정되어 있는 프랑스 대선에서 극우정당인 국민전선(National Front: FN)의 당수 마린 르펜이 중도 우파 출신의 유력 후보 알랭 쥐페와의 대결에서 승리할 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음
- 현재 르펜의 지지율이 약 30%대를 전후하고 있으며, 반유럽통합과 현재의 난민과 이민정책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르펜의 집권은 유럽통합의 분해 가능성을 높이는 일임

□ 2017년 독일의 총선과 메르켈의 4선 가능성

- 2017년 9월에 예정된 독일 총선은 유럽통합의 중심 국가인 독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치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중요함
- 현 총리인 메르켈의 4선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12월 6일 기민당 전당 대회에서 당수로 재선출됨으로써 유력한 총리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독일인 55%가 메르켈의 4선 도전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메르켈의 당선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임

□ 오스트리아 선택: 중도좌파 대통령

- 12월 4일 열린 오스트리아 대선 결선투표에서 알렉산더 반 데어 벨렌 무소속 후보가 극우 자유당 노베르트 호퍼 후보에게 승리함
- 이미 지난 5월 22일 결선투표가 무효처리되어 재선거 형식으로 치루어진 대선에서 극우파 후보인 노베르트 호퍼 후보의 당선 가능성으로 주목받았음
- 알렉산더 반 데어 벨렌 후보는 206만2920표(51.7%)를 얻어 192만8530표(48.3%)에 그친 노베르트 호퍼 후보에게 승리를 누르고 승리(부재자 투표 결과를 합하면 53.3% 대 46.7%)

□ 유럽의 주요 국가들 2017년 선거일정 ▲네덜란드 총선(2017년 3월15일) ▲영국 지방 선거(2017년 3월4일) 트럼프 당선에 따른 미국과 유럽의 관계 전환: 탈대서양주의(Post-Atlanticism)

- 네덜란드 총선은 2017년 3월 15일 예정: 극우정당의 제2당 가능성 높음
- 영국의 지방선거가 2017년 3월 4일에 예정: 브렉시트 결정 이후 치러질 선거라는 점에서 영국인들의 정치적 의사 반영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

■ 유럽통합과 EU의 미래

□ 트럼프 당선에 따른 미국과 유럽의 관계 전환: 탈대서양주의(Post-Atlanticism)

-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로 유럽연합과의 무역 마찰 예상
-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 대두
- 미국에 의존하려는 대서양주의의 약화 예상: 브렉시트로 촉발되었으며, 트럼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 해결되지 않는 난민사태

- 제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규모가 큰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의 난민 유입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위기 가중
- 지속적인 테러 상황 발생 및 그로 인한 극우세력의 강화 현상이 전유럽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터키와 러시아의 상황 악화

- EU 가입이 숙명이었던 터키는 지난달 실패한 군부 쿠데타 후폭풍으로 정치적 혼란 상황 지속
-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서방국가의 혼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유대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반엘리트주의와 포퓰리즘(Populism · 인기영합주의)의 확산

- 유럽통합지도자들의 엘리트주의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전유럽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극우정당과 포퓰리즘 정당의 선전과 약진이 유럽연합 전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 금융시장 붕괴 우려

- Brexit와 Italexit으로 인한 유로존 붕괴 가능성과 유럽연합의 해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등장하고 있음

□ EU의 2017년 예산안

- 영국의 탈퇴로 예산안이 수정되어 줄어들 전망이다

FINANCING OF THE GENERAL BUDGET

Appropriations to be covered during the financial year 2017 pursuant to Article 1 of Council Decision 2007/436/EC, Euratom of 7 June 2007 on the system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wn resources

EXPENDITURE

Description	Budget 2017	Budget 2016 (€)	Change (%)
1. Smart and inclusive growth	56 646 663 545	66 246 697 648	- 14,49
2. Sustainable growth: natural resources	55 236 239 537	55 120 803 654	+ 0,21
3. Security and citizenship	3 781 908 287	3 022 287 739	+ 25,13
4. Global Europe	9 289 727 178	10 155 590 403	- 8,53
5. Administration	9 324 103 016	8 950 916 040	+ 4,17
6. Compensation	p.m.	p.m.	—
Special instruments	620 000 000	389 000 000	+ 59,38
Total expenditure (7)	134 898 641 563	143 885 295 484	- 6,25

(7) The figures in this column correspond to those in the 2016 budget (OJ L 48, 24.2.2016, p. 1) plus amending budgets No 1 and No 2/2016 and draft amending budget No 3/2016.
 (8) The third subparagraph of Article 310(1)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reads: 'The revenue and expenditure shown in the budget shall be in bal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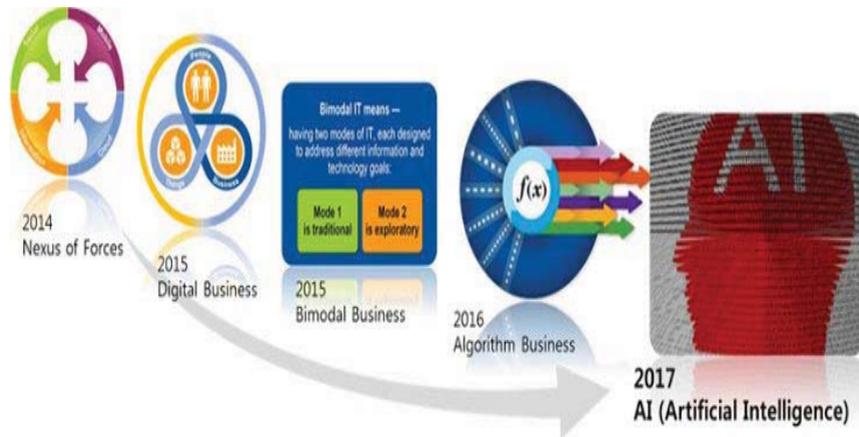
출처: European Commission

■ 유럽의 새로운 트렌드와 변화

□ 제4차 산업혁명과 고립주의의 역설

- 제4차 산업혁명은 역설적이게 인간을 산업계에서 점차 퇴출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유형의 신기술이 등장할 것임

인간 기술의 진화와 발전 양상



출처: <http://mi.jiranssecurity.com/2358>

□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할 영역과 분야



자료: <http://mi.jiransecurity.com/2358>

□ 핀테크¹⁾와 새로운 경제시스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변화와 보호무역주의

- 단순한 인터넷 금융을 넘어 핀테크를 통한 금융통제와 금융산업의 성격이 변화되고 있음
- 보호무역주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에도 중대한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

□ ‘공유(Sharing)’의 가치 증진

- 공유경제: 소유가 아닌 상호 필요에 따라 빌려쓰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클럽(P2P 대출), ‘틴더(데이팅)’, ‘저스트잇(음식 주문)’, ‘위키피디아(온라인백과사전)’, ‘이노센티브(공동 연구 개발 플랫폼)’ 등도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로 분류할 수 있음
- 공유문화: 사회문화적으로 이러한 공유문화가 유럽에서는 정착되고 있

1) 핀테크란 모바일을 통한 결제·송금·자산관리·클라우드 펀딩 등 금융과 IT가 융합된 산업을 의미.

는 상황이며, 2017년에도 주요한 사회적 가치로 확산될 것임

□ E-사회간접자본(E-infrastructure)의 시대

- 사이버 상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유럽의 사이버 사회간접자본 구축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 중임
- 생활의 영역에서부터 과학의 영역까지를 아우르는 유럽 국가들 간의 네트워크의 표준화와 새로운 사이버 인프라 구축

□ 빅데이터 우위의 시대

- 영국의 브렉시트 결과나 미국의 트럼프 당선에는 여론조사보다 빅데이터에 의존한 분석이 결정적이었음
- 여론조사보다는 빅데이터에 의존하여 사회를 분석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임

3)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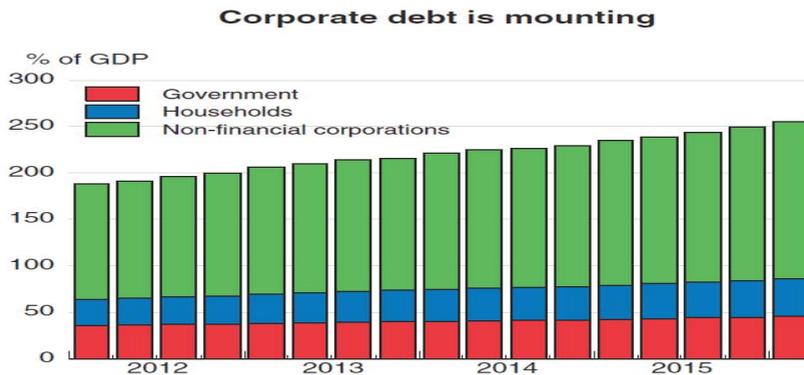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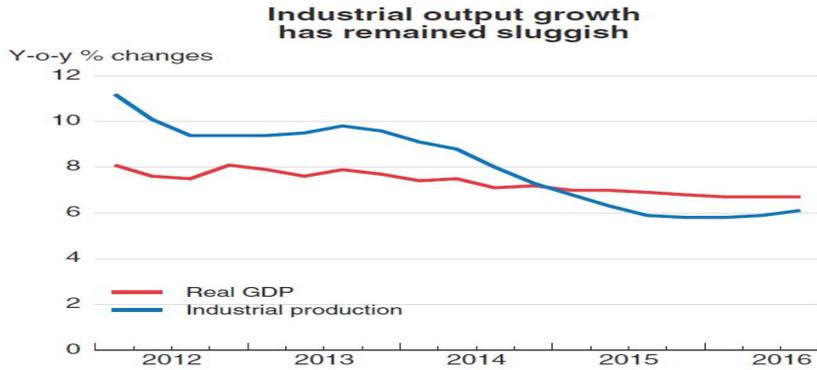
□ 2016년은 소강사회 건설의 원년

- 소강사회(2020년 중국의 1차 목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 ┃ ‘소강(小康)’ 사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이 보장된 사회
- 2016년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쟁점
 - ┃ 13·5 계획, 탈빈(脫貧) 프로젝트, 공급 측 개혁, 일대일로, 자선법(慈善法), 사법체제 개혁, 친환경 발전, 반(反)부패의 제도화
 - ┃ 특히 ‘13·5 계획’ 은 2020년까지 중국의 향후 5년간 발전 전략의 개시를 의미. 마지막 해인 2020년은 공산당 창립 100주년 이후 전면전 소강사회 완성 추구.
 - ┃ 소강사회 건설의 관건은 농촌지역 빈곤 퇴치. 공급 측 개혁은 과잉생산설비 해소 등을 포함한 공급 체제의 수준 및 효율 제고를 통한 성장 동력의 강화에 주안점. 일대일로는 대외 교역량 감소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 발전 네트워크 구상. 자선법 및 사법체제 개혁은 반부패 제도화의 수단적 성격. 친환경 발전은 미세먼지 등의 실질적 문제와 국민의 환경 문제 관심 제고에 대한 대응

□ 경제

- 중국 경제는 2015년 6.9% 실질 성장에 이어 2016-18년 사이에 성장률이 6.7%, 6.4%, 6.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OECD 2016년 11월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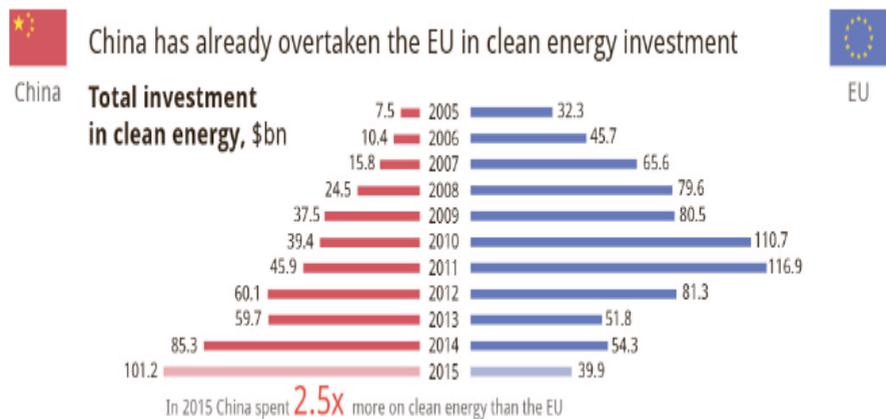
▮ 10년 이상의 기적적 성장(growth miracle) 이후 기업부채의 증가, 국영부문의 과잉 생산 등이 주목받고 있음(아래의 그림은 OECD 자료)



- 그 외 문제(세계경제포럼 보고서)
 - ▮ 부채: 은행대출을 통한 사회금융의 증가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의 증가로 이어져 유동성 수요 지속
 - ▮ 고정자산투자(fixed-asset investment) 급속한 하락: 2002-2012년 민간투자 성장률 평균 20%, 반면 2016년 현재 약 8% 수준
 - ▮ 실업률이 감소되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저하와 결합하여 경제 전반에 악영향 가능성

□ 기타

- 공해와의 전쟁 지속
 - ▮ 2013년 리커창 총리의 전인대 선언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
 - ▮ 관련 연구개발비 2020년까지 GDP 2.5%까지 증액 예정. 이미 세계 최대의 청정 기술 시장



4) 일본

-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의 승리
 - ▮ 연립여당과 합하면 개헌 필요 의석 확보
 - ▮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위기로 개헌보다는 경기 부양 강조 2016년부터 3년간 총 39조엔의 경기 부양 패키지 투입 계획
- 군사력 지속적 증강
 - ▮ 일본 방위성 2017년 예산으로 5조 1686억엔 요구. 전년 대비 2.3% 증액된 것으로 일본 국방예산 사상 가장 많은 액수이자, 5년 연속 증액 편성
- 경제적 정체 또는 성장
 - ▮ 일본 경제는 2015년 0.6% 실질 성장에 이어 2016-18년 사이에 성장률이 0.8%, 1.0%, 0.8%로 정체될 것으로 전망(OECD 2016년 11월 전망치)
 - ▮ 그러나 2020년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한 도시 재건축 붐이 조성

- ▮ GDP 척도가 아니라 총국민소득(GNI)은 2015년에도 2.5% 성장. 지적 재산 등의 연구개발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면 일본 경제는 GDP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평가 가능
- ▮ 아베노믹스의 결과가 엔저 현상과 결합하여 기업의 성장이 이어지고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진행(세계경제포럼 보고서)

5) 인도

- 경제 성장 지속
 - ▮ 2012-2013년 조정기를 거쳐 2015년에 이미 중국의 성장률 초과(7.6%). 2016년-2018년 사이에 7.4%, 7.6%, 7.7%로 꾸준히 성장률 신장시킬 것으로 전망(OECD 2016년 11월 전망치)
- 화폐 개혁
 - ▮ 모디 총리가 부패 근절 위해 고액권 사용 중지 및 신권 교체 단행
- 동아시아 정책의 변화(동아시아연구원 보고서)
 - ▮ 관망(Look East)에서 적극적 관여(Act East) 추진
 - ▮ 안보제공자(security provider)로서의 지도력을 적극적으로 도모

6) 러시아

- 트럼프의 당선으로 새로운 미러관계(reset) 가능성 타진
 - ▮ 미국 차기 정부의 대 러시아 제재 완화 또는 철회 가능성 탐색
- 트럼프의 환경보호정책 전면철회 주장으로 원유 공급과잉으로 인한 유가 하락 가능성
- 2015년에 성장률 -3.7%, 2016년-2018년 사이에도 성장률이 각각 -0.8%, 0.8%, 1.0%로 당분간 경제 성장 정체될 것으로 전망(OECD 2016년 11월 전망치)

II 2017년 한국과 대전세종의 비전

1. 대한민국 거시변화
2. 대한민국 미시변화
3. 도시의 미래와 선진도시 사례
4. 대전세종 현황과 SWOT분석
5. 대전세종 비전의 전략 및 부분별 주요 과제

II. 2017 한국과 대전세종의 비전

1. 대한민국 거시변화

1)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회복력 취약

□ 1,2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 심각

- 국내 경기 지속되는 가운데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최대 불안요소로 작용
 - ▮ 가계부채 규모는 2016년 1,257조, 전년대비 증가율 11%로 역대 최고수준(한국은행). 여기에 2017 가계부채 원금 상환시기 도래, 주택공급과잉,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 등은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하는 부정적 요인

□ 해운조선철강 산업 구조조정의 영향 가시화

- 진행 중인 해운조선철강 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대량실업, 지역경제 침체, 실물경제 등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될 전망
 - ▮ 세계경기침체와 저유가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등 해운조선철강 산업의 구조조정은 고용악화, 가계부채 상환 부담 등 내수경기침체 악영향



자료: 한국은행(2016), 2016하반기 systemic risk 서베이조사

□ 트럼프 당선에 따른 한국경제 영향

- 트럼프정부의 반세계화정책으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됨으로써 한미FTA 일부수정 및 관세와 환율조작국 지정 등을 통해 중국에게 압박함으로써 한국 무역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

2)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구조변화

□ 제4차 산업혁명은 오프라인인 산업세계를 온라인으로 결합하는 것이 핵심

- 제4차 산업혁명은 산업 현장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는 센서, 이를 무선통신으로 전달하는 사물인터넷(IoT), 집계된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인공지능 등이 핵심요소

□ 현재 한국경제의 주력산업은 HW기반인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한국경제가 저성장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큰 이유는 제조업에서 SW중심의 서비스업으로 변신하지 못하기 때문임
- 제4차 산업혁명 대비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한국은 비교 가능한 국가 중 최하위인 25위를 기록

□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은 SW

-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는 센서/임베디드 SW, 사물인터넷,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이므로 SW산업 육성이 핵심

□ 노동시장의 대변화

-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향후 기존의 1/3이상 일자리가 소멸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반면에 새로운 일자리로서 창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3) 정치부문

□ 국정혼란 가속화,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 2016년 국내 정치권력 비리에 따른 국정혼란 지속, 미국대선 및 남북교류 중단, 사드배치결정 후 중국과의 관계 등 대외정세 불확실성 증가
 - ▮ 최순실게이트 등 정치권 비리로 국정혼란 및 국정공백 예상, 여기에 국내 안보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미국대선 결과, 개성공단폐쇄 및 북한핵실험 등에 따른 남북교류 중단,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 등 대내외적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 사회안정망 확보에 대한 정치권의 대책 요구 강화

- 고용, 비정규직, 보육 및 교육, 노후 문제 등 각종 민생불안 증가에 따른 사회안정망 구축 요구가 대선의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
 - ▮ 한국 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관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가장 큰 불안을 느낀 개인문제는 1위 노후준비(25.3%), 2위 취업 및 소득문제(18.4%)임. 즉 조사대상의 43.7%는 현재와 미래의 생계에 대한 불안한 전망을 나타냄

□ 시민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조직적 노력 증가

- 만연한 정치권력 비리로 실망과 불신 증가, 이에 국가와 시장의 의존에서 벗어나 시민적 자율성을 증진하려는 사회단체연대회의 결성 등 시민사회의 조직적 노력 증가



4) 사회부문

□ 사회위기 지속에 따른 사회불안 증가

- 청년실업, 노인빈곤·자살률 증가, 사회양극화 등 대안 없는 사회위기 지속으로 사회불신과 갈등 증가

▮ 현재 청년실업률(15~29세) 9.4%. 노인 빈곤율(65세 이상) 49.6%, 70세 이상 노인자살률 10만 명 당 116.2(OECD국가 1위) 등 각종 사회문제가 지속되지만 대책은 미진한 상태. 따라서 사회 전반에 불신과 갈등 양상 팽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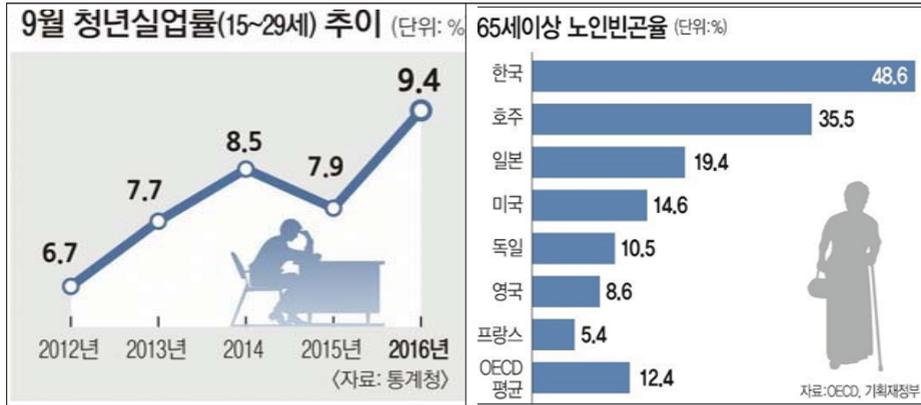
□ 비정규직 증대와 위험의 외주화 확산

- 비정규직이 위험업무를 전담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확산되면서 노동자와 시민안전문제 부각

▮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사망사고 등 비정규직 안전사고 급증,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문제를 넘어 사회안전문제로 확대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노력 증가

- 사회문제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사회혁신과 시민노력 증가,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확산



2. 대한민국 미시변화

1) 시민의 인식과 감정

□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新개인의 탄생

- 저성장, 고용불안, 청년·노인 문제 등 지속되는 사회위기 안에서 새로운 개인유형 증가, 장기 미래계획 보다 현재의 즉각적, 자기지향적 감정과 경험만족 추구
- 정보수집에 강하고 SNS 등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 타인에 대한 신뢰와 연대감은 약한 공동체적 결핍 보유

□ 개인의 자율권과 정서적 소통 욕구 증가

- 가족, 학교, 조직 등 사회 전반의 위계에 대한 탈권위 의식 증가, 개인의 자율권 증대와 정서적 소통에 대한 강한 열망. 자신의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는 통로 요구와 불통이 아닌 소통의 사회문화 추구

2) 미래전망과 지향가치

□ 미래전망: 기술적으로 진보, 사회적으로 양극화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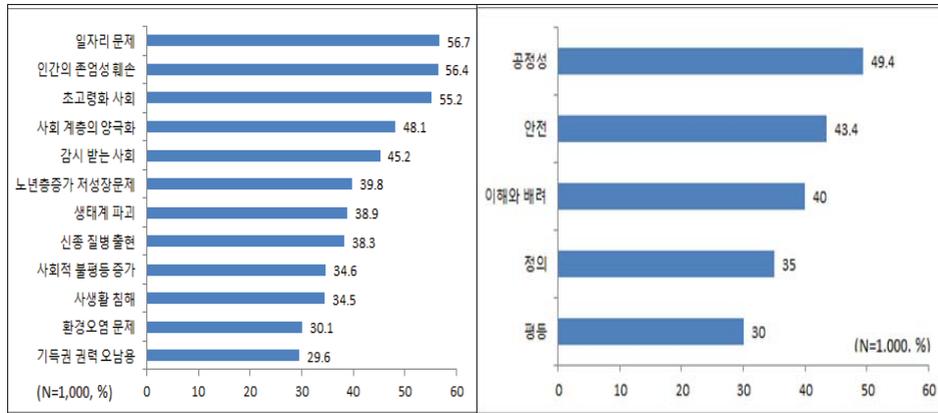
- 시민들은 미래사회는 기술발전으로 삶의 편리성 증가하지만, 문명발전의 혜택은 소수만 누리게 될 것으로 예측. 즉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최인수 외(2016), 『2017 대한민국 트렌드』 사회조사)

- 특히, 로봇과 인공지능 도입 등의 기술발전은 일자리문제와 인간경시 풍조를 양산할 것으로 우려

□ 대한민국 지향 가치: 공정성

- 시민들은 대한민국이 현재 가장 우선해야 하는 가치로 1위 공정성, 2위 안전, 3위 이해와 배려를 선택함. 즉 한국사회를 노력한 만큼 성과가 보장되지 않는 불공정한 사회로 인식(최인수 외(2016), 『2017 대한민국 트렌드』 사회조사)
- 이러한 사회에서의 경쟁은 개인에게 불확실한 미래를 전망하게 하여 피로감을 증대하며, 불공정 프레임에서의 탈출(이민 등)을 시도하게 됨



자료: 최인수 외(2016), 2017 『대한민국 트렌드』 사회조사

3. 도시의 미래와 선진도시 사례

1) 혁신의 실험실로서의 도시 모델 부상

□ 지역혁신의 새로운 모델로서 ‘도시혁신’의 중요성 부상

- 값싸고 보편적인 ICT기술의 확산과 지속가능성(친환경, 재활용, 재사용)을 핵심가치로 하는 새로운 소비와 수요패턴의 등장,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를 해소하려는 공유경제에 대한 요청의 증대 등으로 ICT기반의 도시혁신 추동

- ICT를 기반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는, 스마트도시, 도시전환, 디지털혁신 등 도시혁신 사례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



- 최근 부상하는 ‘도시혁신’의 모델은 한편으로 도시문제 해결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측면과 함께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융복합 기술을 도시인프라에 결합함으로써 센서, 소프트웨어, 웹기반 서비스, 빅데이터 등 첨단 융복합 신성장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시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2) 도시혁신의 국내외사례

□ 맨체스터 과학도시

- 산업혁명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맨체스터는 과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도시성장 모델을 기치로 민간부문의 다양한 도시실험과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CityVerve’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참여, 도시문제해결, 도시혁신 등의 가치 구현

맨체스터 CityVerve의 FutureEverything 주요 프로젝트

- **Talkative bus stops**

버스정류장은 위치 기반 서비스, 센서/비콘(bacons), 모바일 앱과 지능형 디지털 신호(signage)가 구축된 안전한 장소로 전환

- **Management of chronic respiratory conditions**

환자의 상태에 대한 반응 및 지역 의료 서비스 업무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생체 인식 센서 네트워크'가 설치

- **Community wellness**

통근 및 학교 경로를 따라 공원에 배치된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들의 신체활동 및 경주 등에 이용, 대표적인 예로는 맨체스터 거주민들이 달(moon)까지 걸어가는 "위대한 우주 경주 도전(Great Space Race Challenge)"

- **Smart lighting**

스마트 조명 설치로 자가용 사용이 아닌 대안 교통수단의 이용 증가 도모

- **Bike sharing**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ed) 기반의 자전거 공유 서비스의 이용 사물인터넷이 활용

- **Smart air-quality monitoring**

맨체스터 코리더(The Manchester Corridor) 구역에 있는 가로등 기둥과 스트리트 캐비닛(street cabinets) 등 도로 시설물 및 연결 인프라 등 활용, 대기의 질을 측정,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정보 전달하고 도로 옵션과 경로를 지원하는데 제공

- **Social platform**

외이파이를 통한 소셜 네트워크 접속은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상업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핫스팟을 활성화

□ 서울시의 사회혁신과 혁신파크

- 서울시는 시정 기조인 혁신, 협치, 소통을 달성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의 하나로 ‘사회혁신’을 설정하고, 2015년 4월 사회혁신 플랫폼인 ‘서울 혁신파크’를 개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의 공유지이며, 배움과 놀이의 창의공원으로 활용

▮ (구)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원 부지 3만평에 180개 사회혁신그룹과 1,000여명의 사회혁신가 참여



4. 대전세종 현황과 SWOT분석

1) 대전

(1) 현황

□ 인구구조: 청년세대 비중 높은 젊은 도시

- 대전시의 인구는 총1,531,809명으로, 7대 특·광역시 중 낮은 고령인구와 높은 청년인구 비중 그리고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음
- ▮ 7대 특·광역시 중 고령인구 비중은 10.90%(2015년 기준)로 5번째, 청년인구 비중은 21.8%로 2번째로 젊으며, 1인 가구는 25.3%로 가장 많음

□ 도시환경: 편리한 교통, 풍부한 산림·하천 자원으로 친환경적인 도시생활 공간

- 편리한 교통과 산, 하천, 공원 등 자연환경의 우수성 및 접근성으로 거주 시민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 대전 시민들은 대전이 살기 좋은 이유로 편리한 대중교통(25.9%), 자연환경의 우수성과 접근성(28.4%), 대기오염, 소음 등 생활환경 문제적응(14.8%) 순으로 응답함(대전시 지속가능지표 시민의식 조사, 2014)

□ 지역경제: 저조한 최근 경제성장률 및 산업구조 조정 필요

- 2004~2014 기간 동안 대전의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 70.7%로서 전국(71.2%), 충남(124%), 충북(87.3%) 대비 낮은 성장률을 기록
- 동일 기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 57.2%로서 전국 61.0% 보다 낮으며 특광역시 중 5위를 차지
-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이 SW와 서비스이기 때문에 대전의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정책 필요(SW산업 생산액,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모두 전국 3위)

□ 사회복지: 복지수요의 증가, 자활능력에 기반한 생산복지시스템 미흡

- 저출산·고령화 경향과 가족 부양기능 약화, 소득격차 심화와 취약계층의 빈곤 심화 등으로 복지수요 증가
- 하지만 자활능력에 기반한 생산복지체계 미흡으로 대전시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민의 복지체감도 낮음

(2) SWOT분석



2) 세종

(1) 현황

□ 입지여건: 국토 중앙에 위치, 행정중심 도시로 발전

- 세종시는 국토중앙에 위치하여 행정중심 도시로 발전하고 있음. 즉 국가 행정기능을 담당, 광역교통의 중심도시, 경제·사회·문화의 중심도시 가능성 높음

□ 토지이용: 도-농 관련 육성정책 가능

- 세종시 행정구역 총면적 464.8km² 중 읍면지역은 391.7km², 신도시지역 73.1km²
 - ▮ 도시지역 30%는 주거 20.2%, 상업 3.6%, 공업 4.5%, 녹지 71.7%로 구성
 - ▮ 비도시지역 70%는 농림 45.8%(총 면적의 32.1%)를 차지

□ 인구구조: 신도시 건설로 인구증가와 지속적 인구유입 예상

- 세종시 인구는 총239,751명(2016년 9월말 기준)이며, 신도시지역 인구는 세종시 출범이후 약42% 증가
 - ▮ 인구구조는 9세 이하 유아층과 30~40대에 편중(51.3%)
 - ▮ 2040년에는 46만 명 전망(통계청 세종시 전체 추정인구 기준)

□ 주택과 교통: 광역교통 체계와 교통시설 첨단화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조성

- 세종시 출범 후 건설지역의 대규모아파트 공급으로 인한 주택유형 변화
 - ▮ 아파트 76.8%, 단독주택 19.3% 차지(2015년 주택총조사 기준)
- 광역교통 체계와 교통시설 첨단화로 전국 각지로의 연결성, 접근성 우수
 - ▮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관통(남서측), 경부고속도로(동측),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서측)

□ 지역경제: 중부권 경제성장의 견인역할, 주변도시와의 상생발전 강화

- 세종시 총생산액은 3조 480억 원, 연 평균 10.5% 성장률, 충청남도 GRDP의 약3.3%
 - ▮ 산업단지는 총14개소, 사업체수 9,124개, 서비스 산업과 공공기관 관련 산업 증가

(2) SWOT분석



5. 대전세종 비전의 전략 및 부분별 주요과제

1) 대전

(1) 2017 대전의 비전

□ 경제활력

- 대규모 현안 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 모색
 - ▮ 엑스포 재창조 사업 본격 추진, 기초과학연구원 완공을 계기로 대전-대덕 상생협력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노후산업단지 재생, MICE사업 활성화 등 대규모 사업의 본격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로 모색

-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SW산업 육성

▮ SW산업을 대전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 SW관련 콘텐츠 중심의 창업활성화, SW인력양성, SW산업을 대덕특구에 적용하여 MICE사업 콘텐츠개발

□ 도시혁신

- 대규모 대중교통(트램) 혁신, 도시재생, 스마트 안전 등 도시인프라의 혁신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 엑스포 도시철도 2호선(트램) 사업의 본격 추진, 유시티통합센터 중심의 스마트 5대 안전서비스망 구축, 지역정체성 기반의 도시재생 등 도시인프라 혁신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조성

□ 포용도시

- 세대, 계층, 지역, 성별 격차를 완화하고, 도시성장의 성과를 공유하는 포용적 도시시스템 구축

▮ 청년 취·창업 지원 본격화, 맞춤형 급여도입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완화, 성평등을 중심으로 한 포용적 도시 성장 추구

(2) 2017 대전비전에 따른 부문별 주요과제

□ 경제

- 사이언스콤플렉스를 과학과 혁신, 지역상생의 모델로 기획, 기초과학연구원 준공 및 신동 둔곡 지구 과학벨트 사업 추진, 노후산업단지 재생, FIFA 국제스포츠대회 및 아시아·태평양 도시정상회의 개최 등 현안사업의 조속 추진

□ 교통

- 도시철도2호선(트램) 건설을 위한 계획수립과 스마트트램,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계획 등 교통 공영 기능 강화

□ 환경

- 물순환체계의 정립, 저영향 개발 기법도입을 통한 비점오염원 관리, 폐

기물 배출관리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대

□ 복지

- 맞춤형 급여 도입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시민발굴 및 지원강화

□ 여성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여성 일자리의 다각화
- 혐오와 단절, 폭력으로부터의 성평등 추구
- ‘1인 가구 대세 시대’ 를 사는 청년과 노인, 여성에 대한 보살핌

□ 도시계획

-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 도시의 고유한 역사·문화·예술을 바탕으로 사람과 공간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

대전의 비전과 전략 및 주요과제

비전	전략	주요과제
<p>경제활력</p> <p>대규모 현안사업의 본격 추진, 제4차 산업혁명의 SW산업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언스컴플렉스과학과 혁신지역상생의 모델로 기획 · 기초과학연구원 준공 및 신동·둔곡 지구과학벨트 사업 추진 · 노후산업단지 재생 · FIFA국제스포츠대회 및 아시아태평양 도시 정상회의 개최
<p>도시혁신</p> <p>대중교통(트램) 혁신, 도시재생, 스마트 안전 등 도시인프라의 혁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2호선(트램) 건설 계획수립과 스마트트램 유성광역 복합 환승센터 조성, 교통공영기능강화 · 물순환체계의 정립, 폐기물 배출관리 통한 지속가능성 확대 · 시민과함께 하는 도시재생,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p>포용도시</p> <p>세대계층지역·성별 격차 완화, 도시성장의 성과 공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급여 도입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시민발굴 및 지원강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여성 일자리의 다각화 · 혐오와 단절, 폭력으로부터의 성평등 추구 · ‘1인 가구 대세 시대’의 청년과 노인 여성에 대한 보살핌

2) 세종

(1) 2017 세종의 비전

□ 실질적 행정도시

- 지역, 행정을 아울러 국가균형을 매개하는 중심도시 기획
 - ▮ 수도권·충청·영호남을 아우르는 국토중심의 균형벨트 조성, 세계 수범 행정중심도시로 도약을 위한 기반구축, 중앙·지방·시민간의 새로운 협력 거버넌스 모델 설계, 세종 중심의 전국 광역 교통체계 기획

□ 여성아동 친화도시

-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커뮤니티 인프라 조성
 - ▮ 영유아 보육 및 기초연금 확대, 청소년 문화카드 사업, 지방자치회관 건립, 광역복지지원센터, 커뮤니티센터 건립 확대 등 아이와 여성, 가족이 행복한 커뮤니티 인프라 확립

□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 글로벌 도시 모델을 선도하는 미래도시 시스템 개념을 제시, 구현
 - ▮ 첨단스마트도시 인프라 조성, 세종형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행정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미래 도시 인프라 설계 및 구현

(2) 2017 세종비전에 따른 부문별 주요과제

□ 국토 및 지역개발

-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지속 추진, 조치원 서북부도시개발 및 조치원 동서 연결도로 건설, 한솔동 및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지방자치회관 등 건립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사회복지

- 영유아 보육료, 기초연금,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2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개청 및 운영

□ 환경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비위생매립장 정비,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 농업

- 무상급식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및 싱싱문화관 설치, 과일생산시설 현대화

□ 문화체육

- 문화재단 운영, 1생활권 시립도서관 건립, 체육시설 포장재 교체

세종의 비전과 전략 및 주요과제

비전	전략	주요과제
<p>실질적 행정도시</p> <p>지역 행정 아울러 국가 균형을 매개하는 중심도시 기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중심의균형벨트 조성 세계수범 행정중심도시 기반 구축 협력 거버넌스 모델 설계 •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 및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건설 세종 중심의 전국 광역교통 체계 기획 	
<p>여성아동 친화도시</p> <p>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커뮤니티 인프라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보육료, 기초연금,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 2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개칭 및 운영 • 무상급식 지원,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설치 • 문화재단 운영, 1생활권 시립도서관 건립 	
<p>지속가능한 미래도시</p> <p>글로벌 도시 모델을 선도하는 미래도시 구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스마트도시 인프라 조성 세종형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행정 시스템 구축 •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미래 도시 인프라 설계 및 구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위생매립장 정비,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3) 대전세종 상생 협력 사업

□ (지식도시) 광역도시권 역량 강화 체계 구축

- 대전시와 세종시는 국가 핵심 지식창출 집약지로, 인접한 두 시를 상호 연계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간관리 및 기능 연계방안 필요

▮ 대전시(연구 및 첨단과학)와 세종시(행정중심, 국가정책연구)는 국가의 지식생산 핵심기능 도시임.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컨벤션, 호텔 등) 확충과 인재육성을 위한 유기적 연계 고려

▮ 지역 상생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협의체(거버넌스) 필요

□ 상생인프라 확보

● 편리한 교통과 안전한 도시생활을 위한 체계 마련.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난개발 지양과 효율적 자원관리를 위한 상생 인프라 확보

▮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대중교통 체계로 개선, 바이모달 트램, 2층 버스 등 고용량의 좌석버스 도입, 택시 및 장애인콜택시의 통합 운영

▮ 첨단ICT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 재난안전정보 통합 관리

▮ 수도 및 폐기물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동운영 방안 마련

□ 산업혁신 분야 상생발전

● 대전세종의 도시역량은 경제분야의 혁신적 상생이 중요. 협력적 R&D 기능을 강화하여 역량 결집과 비즈니스 활성화 전개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대전세종을 첨단산업기술 융·복합 메카로 육성, 세종과 대전 신동둔곡지구 연결지에 랜드마크 지식타워 건립 등 기획

▮ 세종시 면적의 70%는 비도시지역으로 대전세종의 도농교류 지원, 즉 지역식량체계 (local food system) 구축

▮ 대전세종은 미래를 여는 첨단도시 기능을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두 시를 연계한 문화관광 상품 발굴 및 관광브랜드화 추진

대전세종 상생 협력 사업



(지식도시) 광역도시권 역량강화 체계 구축

지역 상생 발전 실현 할 수 있는 제도적 협의체 구성



지식생산 도시 기능 고려한 기반시설 (컨벤션, 호텔 등) 확충, 인재 육성 유 기적 연계

상생인프라 확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마련
첨단ICT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산업혁신 분야 상생발전

대전-세종 첨단산업기술 융복합 메카 육성

대전-세종 도농교류 지원
지역식량체계 (local food system) 구축

대전-세종 첨단도시 기능 연계한
문화관광 상품 발굴 및 관광브랜딩화

참고문헌

1. 국토연구원(2016), 세종특별자치시 비전2030 중장기발전 전략계획
2. 금홍섭 외(2015), 「2016년 국내외 트렌드 변화에 따른 대전의 비전과 전략」.
대전발전연구원
3. 대전광역시(2016),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4. 세종시(2014),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
5. 이항영·백선아(2016), 「대한민국 토탈트렌드 2017」, 예문
6. 최인수·윤덕환·채선애·송으뜸·김윤미(2016), 「2017 대한민국 트렌드」, 한
국경제신문

III. 2017년 대전세종의 발전 전략과 과제

1. 2017년 대전세종의 발전 전략과 과제

III. 2017년 대전세종의 발전 전략과 과제

1. 상생·협력 발전의 배경

- 오늘날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의 특징은 ‘저성장’ 과 뉴-노멀(New-Normal)로 표현되고 있으며,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불균형 발전, 대기업중심, 위험사회, 지역·계급·계층 간의 불통과 갈등의 시대라 정의 할 수 있음²⁾
-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 게 현실이며, 각종 부정부패와 예산낭비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인 불신을 받고 있음
-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넘어서고 있으나 지방간 자원배분과 획득을 놓고 갈등과 반목으로 지역 간 상생협력과 지역공동체가 분열 되고 중요한 정책결정 지연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의 지속과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방의 위기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임
- 과거 지역발전(regional development) 개념은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의 경제발전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 왔으나, 이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수단으로는 낙후된 지역에 기업유치, 클러스터 조성, 지역 내의 인력양성, 지역거점대학이나 정부기관의 유치 등과 같은 것들이었으며, 이러한 지역발전 정책의 수단들은 여러 가지 효과들을 도모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경제적 관점에 치우침으로써 통합적 발전을 도모하지 못한 문제를 드러냄
- 현대사회는 ‘상생·협력·통합’ 보다는 ‘갈등·반목·분열’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으며, ‘상호이해’ 보다는 ‘이해상충’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임. 특히 대전·세종

2) 본 발제문의 일부 내용은 참고문헌과 함께 대전과 세종이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필자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주로 담은 내용으로, 대전시와 세종시의 입장과 의견을 달리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을 사전에 밝힙니다.

을 중심으로 ‘상생·협력·통합’ 을 강조하고, ‘갈등·반목·분열’ 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는 것은 대전·세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임

- 이런 와중에 지난 10월 대전과 세종 양 도시의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견인할 핵심 싱크탱크가 될 대전·세종연구원이 본격 개원하면서, 대전과 세종을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묶어 과학도시와 행정도시라는 두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경쟁력 있는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음
- 아울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그 중요한 국정과제의 기치로 내세워 추진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가 본격 출범한 이후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주민과 주민, 지방정부와 주민 간의 크고 작은 갈등과 반목이 더욱 더 커지고 있으며, 행정도시의 급속한 팽창은 주변지역과의 새로운 갈등과 더불어 상생발전이라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필자는 대전·세종의 발전전략과 비전을 모색해 보고자, 민선6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냉정하게 진단해 보고, 양 지역 간 상생협력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양 도시의 발전비전과 과제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함

2. 민선6기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진단

1) 민선6기 대전광역시 평가

- 민선6기 출범 이후 대전시는 도시철도2호선 건설방식을 트램으로 확정하고 갈등조정 및 소통을 위해 시민행복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6대 영역 21대 핵심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했으며,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시산하 공기업사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바 있음
-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권선택 시장의 선거재판에 따른 우려로 인해, 시장에 당선된 단체장이 시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닌, 대전시민들이 시장의 안위와 시정을 걱정해야 했던 지난 2년이 아니었나하는 생각됨
- 특히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수돗물 민영화 논란과 시산하 기관장과 직원

들 간의 인사갈등, 서남부권호수공원 개발 논란, 일부 구청장과의 갈등 등 이런저런 잡음과 논란을 초래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그런 점에서 본격적인 민선6기 3년차를 맞이하는 2017년 대전시정은 약속사업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6대연역 21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방자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도시철도2호선 등 대중교통문제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도시균형발전과 시민참여에 기반을 둔 시정운영,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해법을 능동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임
- 특히 대전의 미래 먹거리를 보장받기 위해 대덕특구를 활용한 새로운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과제와 더불어 전국 2위의 서비스비중이 높은 도시라는 점에서, 자본규모가 작고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 과제를 민선6기 대전광역시는 떠안고 있음
- 아울러 대전시는 중부권 거점도시로서 세종시를 비롯하여 주변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한 비전과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 원도심과 신도시간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위한 구체적인 균형발전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가지고 있음

2) 민선6기 세종특별자치시 평가

- 민선6기 출범이후 세종시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 관리소 등의 중앙부처가 이전하는 정부의 계획을 이끌어냈고,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됐으며,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실질적 행정수도 역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거두었음
- 이외에도 신도시와 조치원 등의 구도심간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과 전체적인 복지기준선을 끌어올리는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음
- 하지만, 민선6기 세종시 출범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거창한 목표는 KTX세종역 신설과 KTX서대전역 경우문제, 그리고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의 몇몇 사안을 두고는 주변지역과의 갈등을 불러일으켰음
- 또한 신도시가 급팽창하고 새로운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면서 금개구리 보전문제나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과 주민간 갈등, 주민과 행복청간의 갈등, 주민과

세종시간 갈등, 행복청과 세종시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난 2014년 이춘희 시장은 당선소감으로 ‘소통’ 을 강조했다며, 시민과의 소통은 물론, 세종시 현안과 주요과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도 했음
- 실제로 세종시 시민사회와의 민관거버넌스 강화와 시민참여 활성화,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세종청사 각 부처와의 업무협조, 행복도시건설청과 LH 등 유관기관과 세종시 건설과정에서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나아가 대외적으로는 충청권 행정협의회와 국회와의 정무적 소통, 또한 박근혜 정부와의 협력적 긴장관계 유지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임
- 하지만 정치와 행정의 본령이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 이라는 기본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면 될 것이나, 지난 민선6기 2년을 되돌아 보았을 때 과연 민선6기 세종시정이 소통을 통한 지역의 문제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는 의문임

3. 대전·세종의 상생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

-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과거 권위주의 사회에서 민주적이고 다원화된 사회로 급속하게 전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구성원 사이에 대립과 분열, 각종 사회적인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주변 지역과의 갈등과 반목은 지역모두의 상생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이런 지역 및 지역간에 발생하는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 모색하는 일은 그 어떤 과제보다 중요하며, 특히 지역의 상생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이에 대전·세종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과 관련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와 <지방정부간 관계(IGR; Inter-governmental Relations)>, 그리고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관계>를 통해 대전·세종간 상생발전을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중장기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함

□ 첫째, 지속가능한 도시 측면

- 상생협력의 방향은 두 지역간 전략적 협력과 제휴를 통해 역량을 결집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으나, 그 방향과 목표는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이유로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함
- 따라서 도시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새로운 도시성장 및 지역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특히 도시개발에 따른 환경보전 대책과 오염예방과 통합관리가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정책을 제시해야 함
- 특히 과다 개발수요의 위협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고 장기적으로 양적성장을 이유로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함

□ 둘째, 지방정부간 관계(IGR; Inter-governmental Relations) 측면

- 대전·세종간 전략적 협력과 제휴를 통해 역량을 결집하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별자치단체의 자원부족과 기술적 전문성 부족 등의 내부적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과 아울러, 개별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극대화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음
- 경제부분에서도 지역 간 상생발전의 이점으로 두 지역의 강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은 최소화시켜 거래비용 감소나 중복투자 배제와 중심기능의 호혜적 이용을 위한 풀의 형성, 혁신능력의 협동과 융합에 의한 시너지를 형성하는데 핵심목표가 있음
- 따라서 국가, 지역, 기업, 주민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향의 지역간 혁신체계를 마련하고 지역간 갈등과 반목·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발전을 위한 거버넌스를 강고히 구축해야 함

□ 셋째, 시민사회의 역할 측면

- 지역발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지방화 분권화 될수록 자발적 통제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시민사회의 역할은 그 어느 집단보다도 크다는 점에서, 건

강한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지역상생협력방안 모색 못지않게 지역정체성과 전통을 보전하고 형성하기 위한 노력 또한 그 무엇보다 중요함. 특히 대전·세종 모두 전국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도시이자, 정치사회적 특성 또한 후기산업화도시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자본’ 과 ‘공동체 의식’ 이 넘쳐나는 상생협력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임
- 더욱이 세종시는 유입인구의 급증으로 새로운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성과와 지방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 그리고 대전·세종 두 지역의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교류와 소통을 위한 제도마련 등의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지방자치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민참여 부재와 자율성이 배제된 지방자치 제도 탓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강한 단체장 약한 지방의회>라는 구조를 개선하고 형식적인 주민참여제도를 과감히 바꾸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사회에서 형성된 사회적자본과 거버넌스 역량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경제성장까지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대전·세종의 상생협력을 위한 2017년 발전전략 과제

앞에서 제시한 대전·세종의 상생협력을 위한 2017년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단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1) 지속가능한 도시 측면

-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책추진 방향 전환
 - 과거 토목 개발시대를 벗어나 시민의 삶의 질 문제해소를 위한 정책의 대전환
-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관리

- ▮ 주변지역과 연계한 광역권 차원의 도시의 성장관리정책 도입
-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부합하는 관련계획의 재검토 및 대안모색
 - ▮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당면한 지속가능한 대전·세종 발전을 위한 목표 설정
 - ▮ 관련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대안 모색
- 시민의 삶의 질, 생태적 가치, 분배정의를 추구하는 생활정치 구현
 - ▮ 도시의 난개발을 예방
 - ▮ 신도시와 구도심권과의 균형발전 등 도시공간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

2) 지방정부 관계 측면(공조협력, 공유도시, 기능 확장 등)

- 대전과 세종의 상생협력 우선
 - ▮ 지방정부 주도의 상생협력 아닌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상생협력 방안 모색
 - ▮ 충남, 충북 등 충청권 및 기타지역과의 상생협력과 갈등관리 역량 제고
 - ▮ 기존 충청권행정협의회를 상설협력기구로 위상을 격상
 - ▶ 이를 통해 지방의 위기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 지역의 공동현안 성공추진을 위한 공조협력
 - ▮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회분원,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
 - ▮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 등의 행정수도 정상추진 공론화
 - ▮ 도시철도2호선, (구)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법·제도 및 예산확보
- 새로운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공조협력
 - ▮ 과학벨트 조성을 앞두고 공동산업단지 조성 등의 공조협력
 - ▮ 과학도시와 행정도시가 상생하는 신성장동력 발굴 및 추진
 - ▮ 예산확보 등의 체계적인 공조협력을 위해서는 민·관·산·학 중심의 상

호협력 모색

- 대전·세종의 상생발전과 성장을 위해 조직 및 기구의 지속적인 통합추진
 - ▮ 대전·세종연구원 설립의 사례에서처럼 상호협력 할 수 있는 조직의 통합 추진
 - ▮ 세종시가 설치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대전시와의 통합추진 적극 검토
 - ▮ 마케팅공사, 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 연구기능, 인재개발원 등
 - ▶ 양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에서 적극검토
 - (가칭)한국분권센터 설치운영
 - ▮ 세종시는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상징도시라는 점
 - ▮ 대전시와 세종시가 공동으로 가칭 한국분권센터 설치
 -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한 각종 연구를 전문화하고 체계화 함
 - ▮ 중앙권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지방단위의 네트워크 구축
 - ▶ 장기적으로 정부와 협의하여 아시아분권센터 유치
 - 기타 상생발전 방안 모색
 - ▮ 두 지역 간 대표축제 발굴 및 공동개최
 - ▮ 트램과 BRT등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공조협력
 - ▮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의 강점을 활용 농업부문(로컬푸드)의 공동협력
 - ▮ 대전의 광역도시권 기능(문화예술의 전당, 프로스포츠, 쇼핑 등) 공유
 - ▮ 세종의 행정중심 도시기능(국립도서관 등 행정도시 자원) 공유
 - 상생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칭)대전세종상생협력단 설치
 - ▮ 상생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별도기구 설립
 - ▮ 협력단에는 지방정부 뿐만이 아니라, 산·학·민 등이 참여하도록 함
-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KTX역 신설 논란의 경우, 애초 행정도시 설치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주변지역과의 불필요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의제이니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됨

3) 시민사회의 역할 측면

- 지역간 갈등관리 능력제고
 - ▮ 세종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의 인구사회학적인 변화
 - ▮ 세종시 내부와 대전 충청북을 비롯 인근 지역과의 갈등 발생
 - ▶ 대전·세종을 중심으로 한 상생협력과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상생협력을 위한 비전과 과제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
 - ▮ 상생협력을 위한 지속가능한 전략 수립.
 - ▮ 상생협력의 가치를 양 지역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공유하고 합의
- 지역정체성 형성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 ▮ 지역사회의 전통자원과 스토리텔링에 대한 연구 강화
 - ▮ 지역사회에 대한 진단 및 지역연구 활성화와 지원 강화
- 지방정부만의 상생협력이 아닌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상생협력이 되어야 함

5. 나오는 말

- 대전·세종간 상생협력과 발전을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요란한 구호 보다는 양 지역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대전·세종의 상생발전이 인근 충청북지역과의 상생협력의 시너지 효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전·세종간 상생협력 발전의 핵심전략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무엇보다 대전·세종이 상생협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을 위한 지속가능한 전략을 수립하고, 상생협력의 가치를 양 지역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공유하고 합의하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됨

- 또한 과학도시인 대전과 행정도시인 세종이 사회경제적인 상호의존성에 기초해서
로간의 경쟁과 출혈은 최소화하고 공동이익은 극대화하려는 상생협력과 발전 전
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 사료됨
- 대전·세종간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현 시기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
방정부의 의지이며,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방안이 준비되고 추진되려면
양 지역 주민들은 물론 각계의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속에 합의안에 대해 시민적
합의와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가야 할 것임
- 어릴 적 기억 속에 우물은 마을공동체의 상징이었음, 이미 153만 대전광역시민과
25만 세종특별자치시민들은 대전에서 정수한 수돗물을 다함께 먹고 있다는 점에
서, 이미 대전과 세종은 이웃이 아닌 백년지대계를 함께 만들고 살아가야할 운명
공동체나 다름없음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1. 곽현근 외(2014), 2014년 지방선거 대전시장후보자 공약평가, 지역정책포럼
2. 권선택(2014),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대전광역시
3. 금홍섭(2012), 올바른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몇 가지 의견, 혁신자치포럼 창립대회 자료집: 111~114
4. ---- 외(2015), 2016년 국내외 트렌드 변화에 따른 대전의 비전과 전략, 대전발전연구원
5. ---- 외(2015), 지역사회 연구활동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전발전연구원
6. 김필두(1996),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갈등해소방안, 지방행정연구원
7. 송재봉(2015), 지방자치 현실과 혁신방향: 지방자치운동은 지역을 바꾸고 있는가?, 혁신자치포럼 창립포럼
8. 심교언 외(2015),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건축59(03):21~25
9. 이준건 외(2014), 충청권의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갈등관리연구, 1(2):145~172
10. 이춘희(2016), 100대과제 및 일반공약 추진상황 보고회자료, 세종특별자치시
11. 최진혁(2015),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제: 정부부처 이전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6(4): 143~170

IV. 「2017 대전세종비전」 워크숍 토론요지

「2017 대전세종비전」 워크숍

- ▶ 급변하는 국제관계와 한국의 대응, 대전세종의 전략 모색
- ▶ 2016년 성찰과 2017년의 시대담론과 화두 탐색
- ▶ 2017년 대전시-세종시의 비전과 과제 도출

I 행사 개요

- 일시 : 2016년 12월 15일(목) 14:30 - 17:50
- 장소 : 대전세종연구원 대회의실(2층)
- 주최 :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세종상생포럼, 대전시민사회연
구소, 지역정책포럼, 희망정책네트워크

II 진행 순서

진행사회 : 김기희(대전세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시 간		내 용
14:30~14:35	5분	개회 인사말 : 유재일 대전세종연구원장
14:35~15:25	50분	제1부 : 제18회 미래기획포럼 주제 : “국제관계의 대전환과 한국의 전략” 발표 :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 질의응답
15:25~15:35	10분	휴식
15:35~16:20	45분	제2부 : 2017년 대전세종비전 전체회의 사회 : 정선기(대전시민사회연구소장, 충남대) 발표1 : “2017 글로벌 트렌드 & 주요 선진국가 비전” 고봉준(충남대)

		<p>김소영(KAIST) 김종범(대전대) 이정범(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발표2 : “2017년 한국과 대전세종의 비전” 안기돈(충남대) 문경원(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장) 황혜란(대전세종연구원 과학도시연구센터장) 발표3 : “2017년 대전세종의 발전 전략과 과제” 금홍섭(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 김수현(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p>
16:20~16:30	10분	휴식
16:30~17:20	50분	<p>제3부 : 2017년 대전세종비전 분과회의 (92인 = 외부 66인 + 내부 26인) 제1분과(대전시 총론) 위원장 : 김영진(희망정책네트워크 공동대표, 대전대) 제2분과(경제 · 과학기술) 위원장 : 최효철(대전대) 제3분과(도시계획 · 안전) 위원장 : 임운택(한밭대) 제4분과(복지 · 여성) 위원장 : 김경희(대전세종여성정책포럼 공동대표) 제5분과(교통 · 환경) 위원장 : 김종남(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 제6분과(문화 · 교육) 위원장 : 박찬인(충남대) 제7분과(세종시 지속가능한 성장) 위원장 : 문경원(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장) 제8분과(세종시 질 좋은 시민의 삶) 위원장 : 신희권(충남대)</p>
17:20~17:50	30분	제4부 : 분과회의 결과 보고
17:50~18:00	10분	식당 이동
18:00~19:30	90분	식사 (권선택 대전시장님, 이춘희 세종시장님 참석)
19:30		마침

Ⅲ

「2016 대전세종비전」 분과 구성

□ 제1분과 : 대전시 총론

	성명	소속	비고
1	김영진	희망정책네트워크 공동대표, 대전대 법학과 교수	위원장
2	고봉준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3	금홍섭	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	
4	김기희	대전세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5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6	김 욱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7	김용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8	김종범	대전대 글로벌융합창의학부 교수	
9	김창수	대전대 글로벌융합창의학부 교수	
10	안기돈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11	유병선	대전세종연구원 경제사회지표조사와 사회적자본연구센터장	간사
12	유재일	대전세종연구원 원장	

□ 제2분과 : 경제 · 과학기술

	성명	소속	비고
1	최효철	대전대 경제학과 교수	위원장
2	강영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간사
3	김성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4	김진	한남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5	남기곤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6	남성집	한남대 경영학과 교수	
7	남승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8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9	유승민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이사장	
10	은응	한남대 무역학과 교수	
11	임성복	대전세종연구원 경제교육센터장	
12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13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14	황혜란	대전세종연구원 과학도시연구센터장	

□ 제3분과 : 도시계획·안전

	성명	소속	비고
1	임윤택	한밭대 도시공학과 교수	위원장
2	김용동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김용원	건양대 사이버보안공학과 교수	
4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행(연대기획국장)	
5	염인섭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6	이형복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디자인센터장	
7	이희준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8	임병호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9	전영훈	대전대 건축학과 교수	
10	지남석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간사

□ 제4분과 : 복지·여성

	성명	소속	비고
1	김경희	대전세종여성정책포럼 공동대표	위원장
2	김영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류진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4	박노동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5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6	이연복	우송정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7	이영미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8	장창수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9	주혜진	대전세종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장	간사
10	채계순	대전여민회 대표	
11	최문정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12	최인이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 제5분과 : 교통·환경

	성명	소속	비고
1	김종남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	위원장
2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3	김명수	한밭대 도시공학과 교수	
4	김선태	대전대 환경공학과 교수	
5	문충만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간사
6	이범규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7	이재근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	
8	이정범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9	이진선	우송대 철도경영학과 교수	
10	정환도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제6분과 : 문화·교육

	성명	소속	비고
1	박찬인	충남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위원장
2	김정숙	충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3	김한수	건양대 스포츠의학과 교수	
4	민윤기	충남대 심리학과 교수	
5	송기한	대전대 국어국문창작학부 교수	
6	이정립	대전세종연구원 초빙연구원	
7	이종영	대덕대 생활체육학과 교수	
8	임종호	대전대 사회체육학과 교수	
9	정선기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10	정주영	충남대 수의학과 교수	
11	한상헌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간사
12	허창수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제7분과 : 세종시 지속가능한 성장

	성명	소속	비고
1	문경원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장	위원장
2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3	남수중	공주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4	류철호	건양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5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6	박혜경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7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8	안병구	홍익대 산업기술연구소 소장	
9	이은재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간사
10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11	정경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제8분과 : 세종시 질 좋은 시민의 삶

	성명	소속	비고
1	신희권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위원장
2	김윤정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3	류유선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간사
4	박상옥	공주대 교육학과 교수	
5	서지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6	심우찬	대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7	엄현섭	건양대 스포츠의학과 교수	
8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9	이상점	세종YMCA 사무총장	
10	임재일	공주대 미술교육학과 교수	
11	최길수	대전세종연구원 상생협력실장	

□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 국내

-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정국의 불확실성 고조
- ▮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결 여부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청권의 핵심이익이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 ▮ 중앙 권력의 공백이 발생한 시기일수록 지역이익을 도모하는 기회로 활용 가능
- ▮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방자치와 관련한 헌법규정 개정 노력 필요
- ▮ 국민의 기본권(자기결정권, 평등권) 보장과 지방분권의 원칙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
- ▮ 지방자치관련법령(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일괄이양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등)의 개선 촉구를 위한 모든 지방정부의 협력 모색
- ▮ (가칭) 대전·세종 지방정부헌법 제정 고려

• 국외

-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이후 미국의 신고립주의(미국우선주의) 확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안보와 관련된 각국의 이해 충돌(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 중국의 신형관계론, 일본의 재무장), 세계적 경제성장의 둔화 등이 예상
- ▮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 대 중국 정책의 변화 주시
- ▮ 4차 산업혁명을 위기 극복의 기회로 활용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실업·양극화·소외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 구축

□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활성화 모색

• 공공외교법 시행령 발효(2016. 8. 4.)

- ▮ 외교부 주관으로 ‘공공외교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인 바, 지방정부 차원에서

글로벌화를 위한 노력과 구체적 방법 모색 필요

- ▮ 아태도시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활용하여 지역의 미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류정책 구상
- ▮ 최근 안보적 이유로 한·중 중앙정부 간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국과의 교류증진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도시 정체성 확립

- “젊고 똑똑한 도시”
 - ▮ 변화에 잘 대처하고, 혁신의 실험장이 되는 도시 정체성 모색
- “청년이 살맛나는 도시”
 - ▮ 보다 효율적인 청년실업 해소 방안, 청년창업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 청년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

□ 4차 산업혁명에의 대응

-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연계 육성
 - ▮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구분없이 모든 부문에 4차산업혁명이 영향을 미치고, 산업간 경계가 느슨해질 것. 이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연계 육성이 중요
- 지역적 영향을 분석해 효과적으로 대응
 - ▮ 4차 산업혁명의 지역적 영향을 분석 연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 ▮ 그동안 지역내에서 변방산업으로 여겨졌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연계 발전을 모색

□ 전략적 창업 육성

- 창업투자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 창업 지원 전략의 수립 및 추진
 - ▮ 창업지원현황 파악, 창업활성화의 매커니즘을 밝히고 창업 시스템의 결함을 보완
 - ▮ 창업자의 기술역량(기술정보공개, 기술매칭, 기술개발지원 등)의 보완, 경영역량의 보완(멘토링, 교육, 경영지원서비스 등)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 ▮ 창업이후 성장기까지의 지원체계 강화 필요. 현재의 창업지원활동이 미흡하므로 TRL 5단계 이후의 상품화지원-기업성장지원 등을 보완

□ 기술개발 성과의 산업계 활용 확산

- 브로커리지 산업 육성
 - ▮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중간조직의 확대와 함께, 기술사업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브로커리지 산업(벤처캐피탈, 전문인큐베이션업체, 기타 창업육성조직) 육성 필요
- 과학-산업 생태계 조성
 - ▮ 과학기술과 기업의 니즈를 연계하는 과학-산업생태계의 구축이 필요(연구기관-기업간 연계활성화, 과학기술금융활성화, 은퇴 과학기술 인적자원의 효율

적 활용 등)

- ▮ 신기술 정보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 오픈마켓 조성
- ▮ 기술 거래시장(특허기술거래소 등) 육성

□ 세종시와의 산업적 연계 발전

- 행정 연구기능과 연계한 관련 산업 육성 필요
 - ▮ 컨벤션 서비스, 교육서비스, 행정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육성

□ 도시계획

- 성장관리로의 전환
 - ▮ 인구 정체 시대에 대비하여 장래 대전시 인구규모를 고려한 도시계획 재구성 필요
 - ▮ 기존의 개발 중심에서 성장관리 중심으로의 도시정책 전환 요구
- 광역 도시구상
 - ▮ 장래 대전과 세종시 전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분야별 또는 사업별 상충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점검 필요
 - ▮ 대전, 세종, 청주를 아우르는 광역권 도시계획 또는 대전·세종의 연관성을 제고하는 전략계획 수립 필요

□ 도시재생

- 재생사업 활성화
 - ▮ 무분별한 외곽 개발을 지양하고, 도시재생(원도심 활성화)에 주력할 수 있는 도시 관리전략 설정 필요
 - ▮ 대전시와 세종시 모두 노후한 기존 시가지 재생과제 해결 시급. 대전시의 경우, 기존 원도심 주변에 집중되어 있는 재생사업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실제 재생이 시급한 지역에 적절하게 도입하도록 하는 정책 마련 필요
- 사람 중심의 재생 추진
 - ▮ 2017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마중물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 효과 측면에서의 심도있는 검토 필요. 관 주도의 프로젝트 추진의 한계를 인식하고, 장기적 안목에서의 대전시 도시재생 방향 재설정 필요
 - ▮ 물리적 성과 중심에서 탈피하고, 사람·공동체·커뮤니티 등 재생 주체의 역량 제고에 주력(도시재생지원센터 기능 강화)

□ 생활안전

- 생활밀착형 시스템
 - ▮ 안전에 대한 요구 증대와 관련범위 확대로 시 차원의 종합관리대책 필요한 시점(지원시스템, 홍보 강화, 골든타임 확보, 감시시스템, 비상 행동 매뉴얼 배포, 긴급 후송 시스템, 재정지원 확대 등)
 - ▮ 범죄예방, 소방관리, 재난대응, 대피, 교육·홍보 등 시민 생활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제반 영역들이 대전시 자체 시스템 하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 선제적 예방관리
 - ▮ 범죄, 안전 등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사후관리가 아닌 선제적 예방·대응이 이루어지는 체계 구축
-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 ▮ 안전에 대한 시민 관심이 증가한 시점에서 생활밀착형, 선제적 예방관리 시스템이 대전시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검토

□ 복지 동서격차의 해소

- 신도심과 구도심, 동서 간 삶의 질 격차
 - ▮ 삶의 여러 측면, 특히 복지와 교육면에서 거주지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적극적인 대책 강구 필요
 - ▮ 여성 내 계층에 따른 격차가 거주지, 직업, 노동형태 등에 따라 세분화되고 심화되고 있음. 격차에 따른 복지 수요와 공급 간 조화가 요구됨
- 성장과 발전 패러다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 성장을 지향하는 정책 패러다임은 이윤과 소득의 창출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여 왔음. 발전의 지향점이 단순한 성장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것, 혹은 공동체의 성장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함
 - ▮ 이질적 집단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 공동체 안에서의 돌봄과 복지 정책 강구

□ 성평등 관점의 실질적 확산

-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의 활성화
 - ▮ 현재 대학교육에서 ‘성평등 가치의 확산’을 목적으로 한 교양강좌들이 사라지고 있음
 - ▮ 초·중·고교에서 시행되는 성인지 교육인 성교육에 머무르지 않도록 전문화하고 활성화할 필요 있으며, 교사와 학부모, 여러 직장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의 확산이 요구됨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범죄 예방
 - ▮ 인권과 평등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기 위한 ‘인권 지표와 지수’ 연구와 그 결과에 대한 공유 등이 요구됨. 인권 침해와 혐오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함
 - ▮ 교육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소수자, 약자, 여성에 대한 혐오 방지 및 제도적 지원이 요구됨.

- 성 주류화의 확산과 성과 점검

- ▮ 모든 정책 영역에 성인지 관점이 도입되어야 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 주류화 정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함.

□ 제4차 산업혁명과 다양한 여성 일자리의 창출

- 여성 경력단절, 저임금·불안정 노동 실태 개선

- ▮ 여전히 일과 가정의 양립 이슈는 여성 정책의 큰 화두임. 경력단절 예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고민해야 함.

- ▮ 제4차 산업혁명에 여성들이 대비하고 있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4차산업혁명은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대비가 요구됨

□ 저출산·고령화 대응

- 돌봄의 양질화

- ▮ 지방재정에만 의존한 돌봄 정책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양질의 돌봄 서비스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임

- ▮ 다양한 사회 돌봄 서비스의 발굴과 중앙정부와의 협력에 근거한 돌봄 정책의 양질화가 시급함

□ 지역 여성의 참여에 기반 한 젠더 거버넌스 구축과 활성화

- 지역 여성들이 참여하는 젠더 거버넌스

- ▮ 자발성에 근거 한 여성들의 정책 의제 발굴과 제안 기회가 보다 풍부하게 제공되어야함

- ▮ 새로운 이주민이 많은 세종지역의 정책 의제 발굴과 활용에 대전-세종 간 인재 풀 형성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교통부문

• 대전-세종 상생부문

- ▮ BRT 수요가 예상보다 40%이상 많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앞으로의 정확한 수요 예측과 그에 따른 BRT 노선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 정책적으로 두 지역간의 차이가 있는 시스템(택시 요금 체계 등)에 대하여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대전시 2호선 트램부문

- ▮ 트램 건설에 앞서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이어지는 수요관리가 필요하며 노선역 근처 주차장 건설 등 이와 관련한 서비스 개척 필요
- ▮ 승용차 운전자와 2호선 이용객의 분산효과를 위해 도안신도시의 동서대로와 도안대로 등의 도로개선이 필요함

• KTX 세종역부문

- ▮ KTX 세종역 유치와 관련하여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이를 위한 방안 마련이나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역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문

• 대전-세종 상생부문

- ▮ 환경적인 부문에서 대전-세종간의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부터 필요할 것으로 사료
- ▮ 두 도시간의 공통 이슈인 대청호나 금강 수질 등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시민참여 형태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

• 환경관리부문

- 대전의 환경지표는 다른 도시보다 좋을 수 있으나 아직 많은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됨
- 환경적인 문제의 접근을 이슈보다는 과학적인 접근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행정적인 절차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시장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기술 등의 활용이 필요함

□ 문화예술 사업의 강화 및 효율적 관리

- 열악한 지역문화예술 예산의 효율적 배분
 - ▮ 선진국에 비해 교육 및 문화예술 예산 책정이 매우 낮고 지역예산은 더욱 열악
 - ▮ 체육과 문화관광의 인위적 통합으로 인한 비효율성 개선
- 문화예술 사업의 철저한 검토 관리
 - ▮ 문화이벤트 추진 단계부터 손익분기점을 면밀히 검토
 - ▮ 사업추진 주체 간의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막는 시민감시체제 강화, 개최된 문화예술사업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

□ 대전시와 세종시간 문화 상생 모색

- 도시 여력을 감안하여 문화 인프라의 중복 개선
 - ▮ 세종시가 독자적으로 예술의 전당을 설립하는 것이 무리라면, 대전예술의전당 등 문화예술 향유 인프라를 공유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함
 - ▮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현실에서 대전시와 세종시 각각 개최하고 있는 반려동물축제를 통합하고, 동물구조센터와 플란티스파크의 효율적 공유로 상생 모색
- 문화상생협력을 위한 특수지역을 설정하고 활성화
 - ▮ 대전 노은지구에서 세종시 대평동까지의 지역을 문화예술상생지역으로 육성
 - ▮ 이 지역은 체육 및 교육 분야에서도 상생협력지역으로 육성할 가치가 높음
- 대전시와 세종시를 아우르는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작업
 - ▮ 문화관광자원이 없다는 대전시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대전과 세종을 아울러 문화관광컨텐츠로 스토리텔링 하는 작업이 급선무
 - ▮ 향후 세종시에 국제회의 등 대규모 이벤트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후도시로서 대전의 숙박 시설을 대폭 개선하는 등 선제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

□ 교육에 관한 담론과 철학의 소통

- 대전시와 세종시의 교육현실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회 마련
 - ▮ 교육감의 철학 등 양 도시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공통적 교육 아젠다를 발굴하고 학생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
- 젊음의 도시로서 이미지 구축을 통해 지역인재 유출 차단
 - ▮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청년 세대의 창업과 창직을 위한 지원 강화
 - ▮ 대전시와 세종시의 인구구성이 지니는 장점인 젊음의 도시를 강조하고, 이에 맞는 교육혁신과 스마트교육 환경을 조성

□ 세종시 위상에 맞는 도시계획 추진

- 정부의 적극적 예산 지원
 - ▮ 세종시의 행정적·재정적 조기 안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재정적 지원 부족
 - ▮ 이에 따라, 기존 계획보다 도시 구축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역할 발휘 필요
 - ▮ 청와대 제2집무실, 미래창조과학부 이전 등의 물리적 이전 필요

□ 리빙랩(Living lab) 개념 적극 활용

-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도시 모델 구축
 - ▮ 대전의 에너지 및 RCT 등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이 세종시에 유입될 수 있도록 기술적 측면의 도약 노력 필요
 - ▮ 이를 위해 세종시 시민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실험모델인 리빙랩 개념 적극 도입

□ 도시 균형 발전 노력 필요

- 지역 내 전통과 현대의 조화 노력 필요
 - ▮ 세종은 현재 도시개발 계획 위주에 치중하면서 시민의 자생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거 세종시가 지니고 있었던 전통성을 잃어버린 실정임
 - ▮ 세종의 지역적 특성(백제문화, 유교문화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개발과 보전의 균형
 - ▮ 세종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 및 개발과 보전의 균형발전 노력 필요

□ 스마트 도시로써의 도약

- 에너지 문제의 자체 해결 및 효율적 활용
 - ▮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하며,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지자체 차원에서 에너지 시스템이 개개인 간 grid로 연결되어 중개할 수 있는 모델 구축 필요

•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통한 스마트 도시로의 성장

▮ 싱가포르 등 선진도시의 벤치마킹을 바탕으로 입체적 도시공간 구획,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 성장관리, 에너지 농장 활용 등 적극 도입

□ 미래 수도로써의 역할이 가능한 교통 체계 구축

• 수도 이전에 대비 필요

▮ 단기적 개발에만 치중하게 되면, 향후 수도로써의 위상을 세우기 힘들

▮ 이를 위한 핵심과제는 교통 문제 해결이며, 특히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인근 공항과의 접근성 향상 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 필요

• 지식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 대전과 세종 모두 지식서비스산업의 활성화 도모를 통한 상생 발전 도모

□ 도시인프라 확보

• 교통

- ▮ 세종시내 대중교통시스템 미완비로 인한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 특히 신도시(세종청사 인근)와 구도시(이전 연기군)의 연계 교통이 미비한 상태로, 신도시 주민들은 이주 이전 도시교통과 비교해 불편함을, 구도시 주민들은 신도시와 비교해 교통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 문화예술

- ▮ 문화재단 발족 등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단체가 설립되고 문화예술시설이 확충되고 있지만, 세종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산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문화예술인재 양성 및 세세한 지원 제도 마련 필요

• 도시재생

- ▮ 새롭게 개발 및 건설되고 있는 신도시(세종청사 인근)와 구도시(연기군)간의 사회·문화·경제·행정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격차해소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음
- ▮ 지역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도시 재생의 콘텐츠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도시 정체성

• 행정복합도시

- ▮ 행정복합도시가 정치적 측면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이미지가 되고 있지만, 지역 지자체와 지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정체성 ‘identity’ 를 구축할 필요
- ▮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의 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공론장이 필요하고 공론장을 구성할 다양한 이슈들을 모을 장치가 필요함
- ▮ 행정복합도시 완성을 위한 국회분원 설치, 행정자치부 이전 등을 위한 지역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음

Ⅱ 도시 계획의 실행정도를 점검 할 필요

● 동질성과 다양성

Ⅱ 신도시의 경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듯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으로, 도시 공간이 지나치게 획일적인 문제가 있음

Ⅱ 반면에 지역민은 연령, 직업, 학력, 계층, 출신 등이 다양하며 다양한 곳에서 이주해 지역민의 다름과 차이가 큼

Ⅱ 지역민의 차이와 다름을 고려해 지역발전의 역동성으로 삼을 수 있는 통합의 가치가 요구됨

Ⅱ 누가 세종시민인가라는 문제제기에 답할 수 있는 포용적 태도 필요

□ 지역 공동체

● 정주여건

Ⅱ 정주여건 조성을 통해 지역민의 정착을 유도하는 것 필요

● 환경

Ⅱ 새로운 도시인 만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도시 구현

● 주민건강

Ⅱ 전국체전과 같은 행사를 목표로 행해지는 기존의 엘리트 체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것에 의문. 메달을 딴 선수는 있지만, 그/그녀를 아는 지역민은 없는 상태

Ⅱ 엘리트 체육은 누구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라는 것에서 다시 체육정책을 세워야 함. 지역민 모두가 건강한 방식으로 체육에 대한 투자를 해야할 시기

● 불균형

Ⅱ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불균형 외에 계층간, 세대 간 격차도 커지고 있음

Ⅱ 세종특별자치시의 젊은 이미지로 인해 고령세대의 소외도 커지고 있음. 젊은 층에 집중된 문화 및 복지 시설을 고령세대에게 배분할 필요

Ⅱ 지역간 교육의 격차도 커지고 있음.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의 지역별 배치 필요

□ 세종특별자치시의 과제

- 갈등의 해결
 - ▮ 인근 지역으로부터 인구가 계속 유입되면서, 인근도시와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되고 있음
 - ▮ 국책사업 유치나 시설 및 투자 유치에 있어서 인근 도시와 경쟁 시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음
- 지역 종합발전 계획
 - ▮ 세종특별자치시의 비전을 수립하고 전략과제를 발굴하여 인근지역과 상생협력하는 기반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지향해야 함